

第262回國會
(定期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6年9月15日(金)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인사청문회

審査된案件

1. 200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인사청문회 2

(09시46분 개의)

○**委員長 權哲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委員長 權哲賢**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61조 및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은 교섭단체 간사간에 충분히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해규 위원님 나오셔서 200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임해규 위원입니다.

200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30

일까지 2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휴일과 감사 준비기간을 제외한 실제 감사 일수는 12일입니다. 이 기간 중에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해서 총 49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앙감사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감사는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1반은 10명, 2반은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 본부에 대해서는 총 2일간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첫날인 10월 11일과 10월 27일에 소속기관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였고, 6개의 산하단체는 10월 23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현지에서 실시하며, 10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10월 13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강원도교육청 등 12개의 교육청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립대학교와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주대학교는 현지에서, 서울대학교 등 9개 국립대학은 10월 24일, 서울대학교병원 등 10개 국립대학병원은 10월 26일 각각 국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그러면 200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위원장님, 여기 유인물에는 서울대학교가 현지로 되어 있는데요.

○**委員長 權哲賢** 국회에서 합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잘못된 거지요?

○**委員長 權哲賢** 예, 못 고친 모양입니다. 서울대학교 감사는 국회에 불러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감사반의 편성, 감사 일정, 그리고 보고 및 감사자료 제출 요구, 증인 등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은 부록에 실음)

인사청문회는 10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權哲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인사청문회

○**委員長 權哲賢**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임명된 지 불과 24일 만에 부총리에서 물러나게 된 불행한 사태로 인하여 한 달여의 기간 동안 교육부의 수장이 공석이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자의 맡은 바 임무에 최

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종서 차관을 비롯한 교육인적자원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몸담은 것은 2000년도였습니다. 그 이후 6년 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10명의 교육부 수장이 교체되는 난맥상을 겪어왔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는 수많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면서도 짧은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교육부 수장이 교체되어 온 사실에 대해서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이번 교육부총리후보자에 대해 특히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안정적 교육정책을 회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시로 발표되는 교육정책들이 교육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보다는 오히려 교육현장의 갈등과 사교육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커다란 불안과 실망감을 안겨주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산적한 교육현안을 원만하게 풀어냄으로써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게 해 줄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물인가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심분 감안하셔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난마같이 얽히고설킨 교육현안에 대한 김신일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한국 교육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신일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애매한 표현이나 구구한 변명보다는 본인의 교육철학과 소신에 입각해서 확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이번 청문회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끝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공직후보자의 최종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후보자께서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선서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감사합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5일

공직후보자 김신일

○委員長 權哲賢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신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을 아끼고 염려하시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서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받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의정 수행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가성장의 핵심동력인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 앞에서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교육문제는 지난 60년간 한국사회가 겪어온 고통과 갈등과 모순 속에서 형성·증폭되어 온 것이어서 단기적 처방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는 만성적 질환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줄이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희망을 살리는 데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미력이라도 바쳐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비전과 국가 미래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전 없는 교육정책은 현안에 매몰되어 그 방향성을 잃거나 소모적 쟁론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육정책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이 많고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을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갖는 교육정책의 핵심은 장기적 비전을 토대로 삼아 국민 개개인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그 차이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와 철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사회통합에 대한 필요와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가 대립하는 가운데 그 갈등이 교육문제의 중심부로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능력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노동유연화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복지부담 증가 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해법으로서 교육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장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 하나가 교육에 있어서 평등성과 수월성의 균형신장입니다. 평등성과 수월성은 상호대립 가치가 아니고 상호보완 가치라고 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교육의 토대가 탄탄한 만큼 수월교육을 당당하게 추구할 수 있고, 수월교육이 발전하는 만큼 평등교육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오래된 믿음입니다.

이를 위하여 평준화정책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 학교 내의 교육과정과 교수방식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능력과 재능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일반 학교 내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특별한 교육욕구에 대하여는 전체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이 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평등성과 수월성 신장을 위하여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유아기와 아동기의 기본학습능력 계발 교육의 본격적 시행입니다. 유아기의 가정환경은 기본학습능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학습능력은 학습의 무기와 같은 것이어서 학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 격차는 특별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연령

이 높아짐에 따라,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계속 확대됩니다. 이것이 교육격차를 만듭니다.

저소득층, 소외집단이 불리한 것은 단순한 교육기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입학전형에서 학력의 변별력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애 초기의 학습능력 계발을 조속히 체계적으로 광범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들은 오늘날 매우 힘든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요구는 새로운 문명에 기인하는 새로운 대학기능의 요구이며, 더 현실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고등교육체계 전체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의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과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대학의 위상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체계의 약점의 하나는 학교제도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제도와 병행, 상호 보완하는 평생교육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에 학력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번 밀려나면 교육을 위한 대안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제도의 강화와 위상 제고가 요청됩니다.

그러므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훈련정책을 추진하여 학교·대학과 연계시키고 일과 학습의 세계를 더욱 접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가 명실 공히 국가 인적자원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평생학습사회를 이끌어 갈 선도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화 추세는 교육을 국가 단위로 운영하던 국민국가교육제도의 개방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방화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개방 요구에 미리 대비하면서 동시에 우리 교육기관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유출장학'으로부터 '유치장학'으로 전환하여 외국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교육기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 주체와 단체 간의 불신과 갈등을 줄이는 일입니다. 정말 어렵고 지난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난 40여 년 교육학자로서 살아 온 나름대로의 소신과 철학에 더하여, 그리고 초창기부터 교육시민운동에 참여하여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얽힌 난제들을 푸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름지기 한 국가의 교육정책의 핵심 기조는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의 지혜를 동원하여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소중한 조언과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의 신상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의사진행발언은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해서, 지금 시간이 극단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호영 위원** 질의시간 내에 소화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까?

○**委員長 權哲賢** 예.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TV 생중계도 있고 해서 엄격하게 시간 통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홍 위원 열린우리당의 인천 서구 출신의 김교홍 위원입니다.

먼저 김신일 후보자께서 내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위원으로서 교육현장에 계신 교직원과 학부모님들, 학생 여러분들께 그동안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고, 또 교육부의 수장인 교육부총리의 공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교육부장관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오늘 김신일 후보께서 50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평균 따지면 1년 정도에 걸쳐서 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장관이 바뀌고 이렇게 되어서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교육부 수장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이래서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간의 논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김교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그 점을 늘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고 어떻게든지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장관이 꼭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정한 임기는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교홍 위원 학자는 학문을 연구하고 학문적 소신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40년 동안에 후학을 길러 내면서 교육심리 쪽의 대가라고 할 정도로 후보자께서 연구를 하셨는데, 이제 정책을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교육철학, 교육관,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되는 정책,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대가라고 하는 것은 과찬이시고요, 여하튼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 문제가 난마같이 걸려 있고, 또 이것이 최근에 와서

는 매우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 있어서 문제 풀기가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들과 또 권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협조를 얻어 가면서 잘 풀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홍 위원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이해관계집단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대립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후보자께서 부총리가 되시면 조정하실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모든 분들의 근본적인 목표야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의, 모든 학부모 가정의 최대의 희망인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적어도 불안을 줄이고 이렇게 하자는 뜻은 어느 분이냐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면서 논의를 하면 못 할 것도 없다,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홍 위원 후보자께서 몸담고 계셨던 ‘바른사회시민회의’ 거기의 운영위원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의 내용, 그 단체의 내용을 보면 ‘사학법 개정은 개악이다’, ‘평준화정책은 획일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주된 논조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여러 단체 중에는 그것을 상당히 반대하는 단체도 있고요, 또 교육부의 정책이나 또 우리 당의 정책에서도 굉장히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해집단, 다양한 이해집단과 상반된 집단의 이해 조정,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의구심이 드는데 부총리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단체들의 주장, 철학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와서 매우 정치 쟁점화되는 것 같습니다. 대개 4,5년 전에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비교적 일 반적인……

○김교홍 위원 그러니까 ‘사학법 개정이 개악이다’ 그리고 ‘평준화는 획일적이다’ 이런 논쟁이 있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학법에 대해서 현재 재 개정안이 나와서 바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일정 부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잘 결정해 주시면 충실히 그것을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제가 이번 여름에 저희 인천지역 관내의 40여 개 학교를 직접 다녀보았습니다. 다니면서 공통된 점이 뭐냐 하면 교권에 문제가 있다, 공교육이 지금은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교권 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교권 신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냈습니다.

우리 내정자께서 40년 동안 가르친 그 제자들이 다 교사들로 몸담고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교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또 교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기 진작대책은 무엇인가, 또 교사의 여러 가지의 복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례를 들면 교사들이 체육시간에 탈의를 해야 되는데 탈의실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탈의를 하는 경우, 또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도 없고 방과 후교실 때문에 교실을 빌려주면 자기 연구할 곳도 없고, 또 학년별로 연구실도 없고요.

자, 이런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권 확보, 교권 신장 이런 차원에서 말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후보자께서 교권 신장에 대한 안이 있다면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이 여전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30년, 40년 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그것이 교사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탈의실이 없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교육재정하고 관계된 일이고 그러나 동시에 또 과거에 비해서는 교사들의 권리도 신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 늘려가야 되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사들의 권리 주장과 함께 저는 교원단체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는 책임감도 좀 느끼고 책무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서로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그 문제는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 위원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전임 교육부총리가 논문표절의혹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 큰 사회적인 혼란을 겪고 다시 후보자가 교육부총리로 지명이 되었었는데요, 후보자의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첫째, 부실한 답변이 많습니다. 현 정권의 주요한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과거의 후보자의 소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묻는 부분은 거의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임 교육부총리가 논문표절로 사임에 이르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서면답변이 전임 교육부총리의 답변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낀 부분이 무려 여섯 부분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일일이 지금 항목별로 다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전임 교육부총리가 논문표절로 사임한 바로 뒤에 지명된 부총리 후보자의 답변이 어떻게 이렇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여섯 군데나 똑같을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건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 오신 것이 500여 건이 되고 또 짧은 시간에 제가 전부 답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매우 구체적인 정부 정책을, 내용을 물어오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담당자들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챙겨내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지난 한 달 전의 정책과 지금의 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것들은 제가 그걸 보고 그만 하면 정부로서 답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영 위원** 도움을 받았다는 말은 본인이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검토를 죽 했습니다. 어떤 건 제가 직접 쓰고 다 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보조를 받다 보니 그런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죄송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영 위원 도대체 전임자가 그 난리를 치고 논문표절로 사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답변서 자체가 여섯 군데나 토씨 하나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실한 답변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요구하니까 지금 후보자께서 일일이 답변을 챙기기 때문에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보시다시피 한 500개 되는 것이어서 제가 직접 쓴 것들은 불가피하게 좀 짧고 그래도 많이 참고를 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여하튼 같은 것이 된 것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영 위원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육부가 지금 전임 부총리 사퇴 이후에 논문표절방지책까지도 세우고 있고 이런 마당에 국회에 제출하는 이 답변을 이런 식으로 변명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짧으면 그대로 베껴 내도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아, 글썄, 제가 몇 번이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제가 잘못되었다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영 위원 그다음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언제든지 유지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래서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지거나, 가졌거나 이런 분이 학교의 이사로 들어가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게 봅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전국적으로는 너무 많아서 대구지역만 일단 뽑아봤습니다.

지금 대구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임시이사들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선거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그리고 낙선자의 부인도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사회연구소 출신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말이지요, 문제 있는 학교에 들어가는 임시이사들은 모두 열린우리당과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한다, 대구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특정 정치인, 혹은 교육부의 고위관리를 지낸 분이 추천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고 대구지역 교육계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의 이사들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지에 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주호영 위원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구대학교의 이사로 있던 윤덕홍, 열린우리당 출마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사장 류창우, 대구사회연구소 이사장을 거쳤습니다. 이사 장주효, 윤덕홍과 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찬석, 현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다음에 대구 미래대학 정기숙, 대구사회연구소 이사입니다. 대구예술대학 이사장 윤용희, 17대 열린우리당 후보로 낙선한 분입니다. 김문봉, 참여연대 공동대표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사 서정희,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낙선자인 권기홍, 현 단국대 총장의 부인입니다, 심지어. 그다음에 장영목, 참여연대 고문, 아마 이분이 연세가 70이 넘은 분이 학장으로 가서 학교 자체가 다시 분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남외국어대학 학장 노병수,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수석부위원장입니다. 이사 금병태,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입니다. 교육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제가 말씀드릴까요?

○주호영 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사립대학의 이사 선정 문제는 그 대학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치인들이 특정 대학에 많다고 해서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호영 위원 자, 보십시오. 자율적이 아니고 이것이 임시이사입니다. 교육부에서 임시이사 보낸 분만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좌우간, 제가 특정대학의 그 문제는 아직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제가 확실히 챙겨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말로는 '비리 이사 깨끗이 하자' 그러면서 사실은 코드에 맞는 사람 다 보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 바로잡으세요. 아마 교육부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걸로 저희들은 짐작을 합니다마는 반드시 바로잡으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런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교육부총리 후보자께서는 재산 등록 함에 있어서 장남에 대해서 고지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직후보자 중에서 장남에 대해서 고지거부를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재산은 보니까 약 2억 정도로 신고되어 있고 지금 나이가 썩 많지 않고 직장생활을 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장남은 재산이 대략 시가로 4억대를 육박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까?

○주호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여가 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했고 이 점에 대해서는 거부는 권리니까 할 수 있지만 계속 조사를 해 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추가로 등록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먼저 부총리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 드립니다.

부총리 지명되시기 전에 국제학술세미나에 발표 예정이었던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 모색’이라는 논문이 있더군요. 발표를 못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대부분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문제의식과 미래 비전을 갖고 계신 후보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육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개혁의 성과는 안 나타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한국 교육의 근본 문제는 국가주의적 통제 정책으로 인한 교육의 경직된 획일성과 교육 투자정책의 실패로 인한 교육 여건의 빈곤, 그리고 이에 대한 비정상적 장기간 지속에 기인한 교육자들의 교육정신 상실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도 100% 동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앞으로 부총리

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교육부 정책을 계승할 건 계승해야 되겠지만 또 고칠 것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국가주의적 통제 정책으로 인한 교육의 경직된 획일성’, 교육의 실패를 초래한 경직된 획일성의 한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시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내가 이 건 꼭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하나 들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우리 교육의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어서, 제가 말하자면 장관이 된다면, 여기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특정 정책 사안에 관해서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만약 된다면 ‘내가 이 건 꼭 해 보고 싶다’ 그런 말씀도 어렵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제가 장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또 관련된 정책은 여러 분들과 상의도 해야 되고 또 담당부서의 직원들과도 상의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춘 위원 결론부터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여쭙 보겠습니다.

2008년 서울대 입시안이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논란이 많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김영춘 위원 그중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토익·토플·TEPS 같은 영어시험을 입시사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 또 논술과 면접 비중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서울대 입시안이 중등교육 현장에 미치는 엄청난 파급력과 방향타 설정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총리후보자의 견해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최근에 보도에서 서울대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해치고 그 방향을 잘못 끌

고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교육부는 서울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맡게 되면 그 협의를 더욱 강화해서, 여하튼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빼뜰게 만드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소화하도록 제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김영춘 위원** 변별력을 높여서 좋은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하는 학교의 욕망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서울대 입시안이 갖는 폭발력에 견주어서 국립 서울대학교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지금 학생부의 실질반영률이 아주 미미합니다. 명목상은 50% 그렇다마는, 내년도에 서울대가 좀더 이걸 보장해서 발표를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실질반영률이 올라갈 기미는 별로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선진국의 대학교처럼 입시사정관이 1년 내내 활동하면서 점수로 환산될 수 있는 그런 정량지표로 애들, 학생을 뽑을 게 아니라 그 학생의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성지표들도 개발하고, 학교는 그런 작업들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하면서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변별력 지표들을 자꾸 도입하겠다고 한다면 중등교육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교육부가 서울대와 그냥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대나 다른 대학들의 그런 기본적인 욕구도 해소시켜 주면서 또한 공교육체계 전체의 왜곡을 막는 또 발전을 조장하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김영춘 위원** 다음 질의는요, 지금 교사 성과급제도를 교육부가 적극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예산이 4900억 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작년도까지는 90%를 균등분할해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80%를 균등분할을 하고 20%를 대부분 학교들은 호봉이나 교육 경력을 따져서 차등 지급하는 실정인데 80%라고 하더라도 4000억 원을 그냥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원단체들 중에서는 성과급반환운동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정책이 잘 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거기에는 많은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춘 위원** 고민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성과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정부의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그 점에서도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춘 위원** 정책으로 가는 게, 특히 예산이 몇천억 원, 올해 4900억 원이 수반되는 그런 정책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평가를 거부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까지 다 귀담아 줄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평가지표를 가지고 그야말로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요. 80%, 90%를 균등분할 지급하는 그런 것이 무슨 성과급이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교육투자의 빈곤을 말하면서 그것도 큰 문제로 지적하셨는데 성과급 지급, 사학 같은 이런 것부터 시정하면서 교육투자에, 더 긴요한 일들에 더 돈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파워포인트가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좀 있다가 시작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가 됐습니까?

한나라당 이군현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교수 시절에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9월 5일날 발표 논문 ‘한국의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서 ‘현재 한국의 학교들은 획일성 때문에 수월성도 평등성도 모두 죽었다,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월성 교육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되고 나서 ‘평등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나의 생각은 기본방향에서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교수 시절 생각하고 정부의 교육정책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수월성과 평등성은 항상 균형적으로 신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이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런데 9월 5일자 발표 논문에서 ‘확일성 때문에 수월성도 평등성도 모두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래서 그 둘을 다 키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군현 위원** 교수 시절 생각하고 정부의 교육정책이 일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변함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뭐, 정부가 추진하는 수월성과 평등성의 균형 신장은 같은 것이라고……

○**이군현 위원** 아니, 교수 시절의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정책에 대한 생각하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하고 일치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생각에 변동이 없습니까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변동 없습니까,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제가 기본적 방향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그러냐, 0%가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본 위원은 교수 시절 후보자의 생각하고 정부의 교육정책하고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까?

○**이군현 위원**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화면을 보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주장이 있었지만 제가 네 가지만 소개를 해 봤습니다.

고교평준화 문제, 자립형 사립고 확대 문제, 사학의 자율성 규제 문제, 수능 총점 정보공개 문제, 교수 시절에 평준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반대의 시각을 가졌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보았는데 일단 찬성을, 내정된 이후에는 했습니다. 지금 현

재 정부의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자립형 사립고 학교 문제에 있어서 교수 시절에 찬성을 했는데 지금은 반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을, 근거를 한번…… 넘겨 주십시오.

고교평준화 문제는 보시다시피 교수 시절에는 오른쪽에 있는 저런 출처의 자료에서 평준화는 고등학교의 확일화를 조장…… 시간관계상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준화는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이 아니다’ 하는 것이 2002년 5월 20일에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자립형 사립고 확대 문제에 관계해서 교수 시절에는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고 싶다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우세하다, 위원장 시절 자사고제도협의회 건의문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근거 3을 넘겨 보시지요.

사학의 자율성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교수 시절에 제도적으로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는 진정한 사학이 없다고 한국교육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바란다’…… 노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근거 4를 보겠습니다.

수능 총점 정보공개 문제와 관련해서 수험생에게 총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 입시제도에서 수험생에게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정확히 알려 주지 않는 것은 눈 감고 뒤따라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가지 경우를 보았습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후보자는 교수 시절의 주장과 또 부총리 내정 후의 입장이 많이 바뀐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후보자는 평생 동안 주장해 온 학자적 소신을 접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혹시 노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또는 전화로 임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비서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육부총리로 임명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앞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군현 위원 아니, 이것을 답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까?

○이군현 위원 이것을 답변하시고 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저의 교육 생각과 사상과 또 저의 그동안의 교육 관련 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서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나 또는 직접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서진을 통해서 내정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것 결정되기 전에 한번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군현 위원 만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이군현 위원 그러면 만났을 때 혹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교수였을 때 교수님의 생각이 우리나라 교육개혁을 할 만하다, 그래서 교육개혁을 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추천한다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그 소신을 꺾고 지금 현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해라, 즉 소신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의 이야기를 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께서 계속 소신을 꺾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이군현 위원 아니, 지금 그 답변을 하시고 제가 이야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전제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면 지금 네 가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소신을 꺾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전제로……

○이군현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잠깐 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우

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책을 다 보시면 교육평준화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생각이예요.

그다음에 자립형 사립고는 지금도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더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그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 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학의 자율성 문제, 사학의 자율성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또 동시에, 바로 지난번 학회에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은 동시에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군현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25초가 남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학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추가로, 그런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근거를 대는 글들을 제가 대고 있습니다.

자율성 문제에 대해 지금 후보자께서, 예를 들면 대학 내부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지 말 일이다, 경쟁을 해서 스스로 하게 해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학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렇게 한 것이 획일적 규제를 비판하는 글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이군현 위원도 학자로서 문필 생활을 하셨지만 저런 것들은 제가 신문에, 그때 특정 사안에 관해서 코멘트하느라고 한 것이지 이 제도, 정책에 관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委員長 權哲賢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것에 비해서 아쉽지만 시간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몇 초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다음에 하십시오.

○이군현 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앞서 보신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저

는 소신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에게 명예가 생명이듯이 학자에게는 원칙과 소신이 저는 목숨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자리는 짧고 학자의 소신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로서 갖고 있던 소신을 확고하게 추진하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밀어 드릴 그런 적극적인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權哲賢** 시간을 좀더 확실하게 지켜 주시기 바라고, 마이크가 꺼지고 나면 방송에 나가 지 않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위원** 민병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립학교법과 관련하여 재개정할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지금 국회에서 그렇게 논의 중이시기 때문에..... 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논의를 하시는 데 같이 따라가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민병두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재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까 그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이에요. 그래서 재개정할 지점이 있다는 개인 생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개방형 이사제는 재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어떤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바로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친인척의 임원 취임 문제가 있고요. 그 밖에 회계, 그다음에 학내 인사 등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일정 부분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 이것이 이렇다, 저것이 저렇다기보다 만약에 이쪽을 조금 더 강화하면 저쪽은 조금 더 약화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민병두 위원** 개방성·투명성, 이런 것을 강화한다는 그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물

론입니다, 개방성·투명성은 필요합니다.

○**민병두 위원** 그중의 일부분, 그러니까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일부분 고쳐야 할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배구조 문제랄지, 친인척 문제랄지 또 회계 관계랄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이것만 하면 해결되겠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병두 위원** 큰 틀에 있어서 그 원칙과 정신에 대해서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는 자율성과 함께 공공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만큼 자율성도 더 늘려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민병두 위원** 지금 남은 임기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되지요? 이번에 임명되시면 임기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민병두 위원** 임기 1년 6개월이면 사실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검증도 까다로운 시기에 교육부총리 직을 갖다가 수행하실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라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이 임기 1년 6개월 동안 꼭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민병두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그런데, 그러나 앞의 장관들은 그보다 짧게도 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로 유아기 아동기에 기본 학습능력 개발, 이런 것들을 완성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출발은 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평생교육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논의를 좀 활성화해서 그 필요성에 공감대를 많이 얻으면 출발을 위한 토대는 놓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250년 전에, 산업혁명시기지요. 그 당시에 직업의 종류가 한 400개 됐습니다. 대개 목사, 신부, 군인, 농부 이랬지요. 50년 전의 직업의 종류는 한 1만 개 정도 됩니다. 지금은

직업의 종류가 한 40만 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50년 사이에 한 40배 늘어난 거지요. 250년 전에 비해서 50년 전은, 그것도 한 40배 늘어났으니까 200년 걸렸지요.

지금 이처럼 듣도 보도 못한 직업이 놀라운 속도로 팽창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은 앞으로 일생을 살면서 직업을 다섯 번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직업군을 다섯 번 이상 바꿔 가면서 일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미국 교육부와 노동부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상상력과 창의력이고, 두 번째는 모험을 감내하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사망한 피터 드러커의 '넥스트 소사이어티(Next Society)'에 보면 세계의 모든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연금이 고갈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연금은 이삼십 년 후에 세계의 모든 국가가 고갈될 것이다. 그 반면에 모든 사람들은 두 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50 넘어서 60 넘어서 또 다른 인생을. 평균수명이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런 사회에서 거기에 대비하는 모든 것을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민병두 위원 현재 지식사회를 대개 서플러스 소사이어티(surplus society)라고 하지요, 잉여인간, 잉여사회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고용업무의 성장이 계속되면서 결국 한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20~30%밖에 안 된다, 이런 고용구조의 변화를 볼 때 지금 두 가지, 김신일 후보자께서 지적하신 평생교육의 문제 재교육의 문제와 영유아기에 어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제를 굉장히 잘 정리하신 것 같은데 좀 구체성이 없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영유아기에 애들의 상상력 창의력을 키우는 문제와 그다음에 낙오자가 안 생기고 재취업하고 사회의 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평생교육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우선 간단하게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민병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저도 그런 주장을 늘 해 왔습니다.

유아기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30여 년 전서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할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민병두 위원 평생교육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평생교육은 송구스럽지만 제가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주창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복안도 주장도 했고 동료들도 많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두 위원 평생교육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점 인정 문제 탈지 사회교육기관의 인정 문제, 기업 내 교육기관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시키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민병두 위원 자세한 것은 다시 이따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하지요.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주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후보자께서 앞에서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보완·발전시키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이주호 위원 그런데 사실 평준화의 틀을 유지한다는 것이, 지난 30년간 우리 교육부 관료들이 끊임없이 되풀이해 왔던 말입니다. 결국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빚겨 나가는 상투적인 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준화의 틀이 유지되면서 사실은 지금 저희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학교보다 학원에서 공부하려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지금 해외로 나가서 배회하는 아이들도 많습니

다. 이런 문제들이 소위 평준화의 틀이 유지되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성이 과외비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는데 과연 과외비가 줄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다지 안 줄지 않았습니까?

○이주호 위원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2만 3000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기유학은 어떻습니까?

지금 1999년하고 비교해서 2004년 조기유학생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한 몇 배 정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배가 늘어났습니다. 1만 1000명에서 3만 3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터무니없는 일들이 평준화의 틀 아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평준화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보완하겠다는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선지원 후추첨제라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이주호 위원 저희들이 오늘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선지원 후추첨제 아래서도 소위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지원율의 차이가 엄청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전주에 있는 모 고교의 경우에 250명을 모집하는데 단 6명만 1지망으로 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학교에 결국은, 선지원 후추첨제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다 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학교에 배정된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의 학습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평준화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 관료들이 그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김신일 후보자의 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95년에 교육개혁위원회 때도 같이 일을 하였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학자시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관료들이 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좀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피학교들이, 소위 선지원율이 한 50%

를 밑도는 학교들이 한 몇 개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평준화고교가 한 630개 되는데 그중 몇 개 학교들이 이런 문제 학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저희들이 오늘 처음 발표했는데 17%니까 105개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에 아이들이 그냥 배치되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것만 따로 떼어서 이렇다저렇다 얘기하기가 어렵고 역시 평준화 틀 그 자체와 그것의 기능과 또 그것의 보완 필요성 이런 것에 관해서 함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호 위원 평생 연구를 하셨고 평준화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아마 연구를 많이 하셨을 건데, 제가 또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자립형 사립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사고를 한 2개교 정도 더 시범운영하는 것도 개선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사고에 대한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보니까 귀족학교 입시명문으로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이주호 위원 그런데 입시명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들이 다 입시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이주호 위원 문제는 귀족학교냐 하는 것인데, 자사고가 귀족학교라는 그 근거는 어디에 두시고 서면답변 때 말씀을 하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귀족이니 뭐니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뭐라고 할까 언론 용어라고 그럴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주호 위원 저희가 이 자료를 봤더니 말이죠, 교육개발원에서 평가보고서 나온 것은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 자료 봤습니다.

○이주호 위원 저희들도 꼼꼼히 봤는데 이 자료가 엉터리입니다.

무엇이고 하면, 교육개발원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자사고의 학부모 수입은 소위 총수입으로

잡고 비교하는 다른 학부모들의 수입은 총소득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총수입이 총소득보다 훨씬 많은 것이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자사고 학부모들이 훨씬 더 부유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 평균 총수입이 오히려 평균을 밑돕니다. 한 35만 원 정도를 밑돕니다. 귀족학교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인데 그냥 그대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사고의 확대에 주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자사고의 여러 운영조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15%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학교의 3배 수업료를 내야 되니까, 어려운 애들도 받아들이도록 한다는데, 위원회가 검토해 보니까 15%가 좀 허구더군요. 저희들은 15%의 저소득 학생들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또 수업료 전체의 15%를 그런 학생들을 위해 쓰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어서 이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는 저소득층 학생은 실제로 들어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주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보완을 해야지요.

○이주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시범을 그냥 무작정 연기한 것입니다. 지금 시범실시가, 더 잘 아시겠지만 자사고 얘기가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교육개혁위원회 때, 10년 전에도 나온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시범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사고 문제가 기본적으로 평준화의 틀을 수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정책인 것은 아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십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이 소신을 바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후보자의 평소 사학에 대한 소신은 사학이 사학다워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국공립대학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사학에 대한 정

책이 국공립과의 차별성……

○이주호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 하고 또 오후에……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래서 늘 제가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호 위원 오후에 또 발언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감사합니다.

○이주호 위원 저는 후보자께서 평소에 학자로서 닦아 온 신념과 소신을 그대로 지켜 나가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한테도 불행하고 국민들한테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감사한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위원입니다.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오전에 내정자께서 사학법 관련한 말씀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사학법 개정, 국회에서 논의되면 검토하시겠다는 정도 수준의 말씀이었지 사학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아니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국회에서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또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행정부서에서는 그것을 따라가야지요.

○안민석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사학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셨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논의를 하시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학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만약에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하신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오늘 이 청문회 자리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러니까 그 내용이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데 현재 제 입장은 내가 하자 말자가 아니고 국회에서 이미 이것을 논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부 사람으로서 거기에 충실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민석 위원** 따라서 지금 내정자께서 사학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 거지요?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제 말씀은 여전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안민석 위원** 저도 반복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학법 재개정 필요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해서 그것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민석 위원** 죄송하지만 네 번째 여쭙겠습니다. 사학법 재개정 필요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정치적인 결정에 아주 둔하고 저는 늘 보편적이고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사고체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특정 사안을 놓고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말로 대답……

○**안민석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학법 재개정 필요성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는 필요하다고 말씀도 안 하셨고 또 반대의견도 안 하셨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셨다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저는 어떤 문제라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안민석 위원** 예,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안민석 위원** ‘아이들을 입시에서 살려 내자’, 많이 들으셨던 표현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제가 관계하던 단체에서 썼던 표어입니다.

○**안민석 위원** 교육시민운동단체 대표로 10년 동안 지내셨는데 그 단체에서 ‘아이들을 입시에서 살려 내자’ 이 모토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표현이고, 여기 계신 여야 위원 모두가, 그리고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학생들 모두가 바라는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토가 실현될 수 있기를, 적어도 내정자께서 교육부총리로 임

명되시고 난 다음에 이 모토의 초석만은 다져 내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4년마다 한 번씩 교육올림픽을 치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 열네 번의 대학입시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균 4년 주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올림픽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문제는 올림픽을 하면 몇 년 전에 선수들이 어떤 종목으로 치를지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치를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측성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은 입시지옥의 나락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의 부담에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입시에서 살려 내려면 교육올림픽이 더 이상 개최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전을 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안민석 위원** 그래서 교육올림픽을 없애시든지 아니면 정말 안정성 있고 예측 가능한 교육올림픽을 잘 치러내시는, 큰 획을 그으시는 그런 부총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감사합니다.

○**안민석 위원** 본 위원이 후보자에게 서면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시고자 하는 과제 5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생애에 걸친 평생학습 확대, 교육복지 강화 등 5개 모두 의미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내정자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과제들이 교육계에 불신과 불화가 지금처럼 팽배해 있는 한은 어떠한 과제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내정자께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육계의 신뢰 회복과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특히 학부모와 교육당국, 학부모와 교사들 간의 불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육 현장에서는 전교조와 교총의 불신과 반목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적대적인 관계로까지 치닫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

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지 우리의 교육현장이 다시 활기를 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노력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금 학교에 가 보시면 특히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 교실 천정에 에어컨이 달려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신설 학교는 대체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 에어컨 바로 옆에 선풍기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아마 전기료가 없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민석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학교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것도 역시 아무래도 재정 부족 때문에……

○안민석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급식시설이 없기 때문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급식을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각 교실로 나르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입니다.

도서 교사가 없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부총리로 임명이 되시면 교육현장을 열심히 다니셔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조금 욕심 부린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학교현장을 방문하시는 교육부총리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약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위원 정문헌 위원입니다.

부총리후보자께서 부총리 임명 후에 평소에 가지셨던 교육철학이나 소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잠시 전에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의 질의에 사학법 개정논의가 필요하다는 신념을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생각하고 그런 신념과 소신을 가지시고 교육부장관직을 수행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청문회가 잘 진행이 된다면요.

교육부는 지난 2004년 2월 17일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아울러 청와대는 올 초에 교육 양극화, 그리고 게임의 법칙이라는 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정문헌 위원 부총리 후보자께서는 현재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또 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때문에 가급적이면 핵심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문헌 위원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계 사교육비 지출이 2005년에는 19조 2400억 정도로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 매년 급증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는 학부모들에게 교육이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이며 교육부가 현재까지 추진해 온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정문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일십년의 문제가 아니고 몇십년 쌓여 온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정부가 온갖 대책을 썼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육제도에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중의 하나로 제가 유아기·아동기에 그런 대책을,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또 평생교육체제도 그것의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헌 위원 결국은 이것이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체제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요소를 결정적으로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또 평준화랑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평상시에 꾸준히 자율성과 다양성의 확대를 주장해 오시는데 본 위원은 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평준화 문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우리 공교육체제 전반에 걸쳐되어 있는 것이, 자율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육부가 BK21과 같은 고등교육에서 강조하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경쟁원리하에서 엄격한 평가와 그에 따른 차등 예산지원 시스템이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공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책 중의 하나가 자율성의 확대와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른 경쟁과 이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고를 포함해서 각급 국·공립학교들의 목표와 그에 따른 어떤 달성수준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 즉, 교원평가와 학생들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굳이 등급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 순위를 매기고 하위 학교 5%의 예산을 삭감해서 상위 학교 5%에 선택적으로 집중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저소득층 무상교육 방안에서도 예산을 국·공립학교,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바우처를 줌으로 해서 경쟁을 도입할 수도 있고,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부총리께서는 자신의 교육적 소신으로 주장한 대로 이런 경쟁의 다양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향후 추진해 나갈 방안이신지 또 그런 방안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아이디어 같은 것도 반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정문헌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단계의 학교가 다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대학만 자율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도 필요하고 그런데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정문헌 위원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가 자율성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대학의 입시가 고등학교의 자율성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에 대한 저의 인식이고 그런 점에서 각급 학교의 자율성이 다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정문헌 위원 그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준화랑 연결된 부분을 학자적 양식

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말씀을 드리면 평준화는 유아 초기부터 기본학습능력의 격차가 가정환경의 차이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그것이 대책이 없이 계속 확대가 되고……

○정문헌 위원 기회의 균등이 보장이 되어야 되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러니까 기회균등이라는 것이……

○정문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상시 소신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소신대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교육경쟁력 회복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 중의 하나가 교육계 내의 이해집단 간의 갈등에 교육부가 일관성 없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교원단체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변질될 소지가 있는 방과후 학교, 교원평가제 이런 것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국민 다수가 교육의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런 교육계 내의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총리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런 교원단체, 또 다른 여러 교육 주체들과 여전히 대화를 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문헌 위원 시간상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다 하셨습니다? 시간이 20초 남으셨는데……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열린우리당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교육부총리를 단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이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대 2008년도 입시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단한 학벌주의 사회인데 그 핵심에 대학입시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의 입학 전형은 다른 대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유기흥 위원 따라서 9월 8일 발표된 서울대학교의 2008년도 대입전형은 반드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짚어 보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서울대가 발표한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유기흥 위원 제가 2005년 국정감사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의 심층구술면접이 사실상 본고사화 될 우려가 있다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내신의 형식 반영률이 아닌 실질 반영비율을 높여야 한다 하는 점인데, 이 점에도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유기흥 위원 부총리 후보께서 판단하시기도 내신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전제하에서 학생부의 실질 반영비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데 동의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표를 준비했습니다.

(도표를 제시하며)

자료를 아마 제가 전해 드렸을 텐데요, 첫 번째 표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대학의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입니다.

보시면 반영비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소위 말하는 주요 대학들의 실질 반영률이 평균 이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대학교는 실질 반영비율이 2.28%에 불과하다, 부총리 내정자께서 알고 계신 것도 비슷하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유기흥 위원 두 번째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와 관련된 통계들인데요, 정시모집 비율이 점점 점점 떨어져서 2008년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2005년 12.8%에서 2008년에는 30%가 되어서 2배 이상 늘어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선발이 조금씩이나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이나 학원가에 어떤 속설이 있는가 하면 ‘특기자 전형은 특목고 학생들용이고, 지역균형선발은 내신 좋은 학생들용이고, 그다음에 일반 전형은 논술 잘하는 학생들이 가게 되어 있다’……

어찌 보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일인데 정말 사실의 일단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특기자 전형 세부 사항을 보면 영어 성적 좋고 물리·화학·수학 등의 각종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하고, 특기자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학생들이 대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훨씬 유리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아마도 평면적으로 하면 유리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기흥 위원 결과적으로 2008년 서울대학교 입시안이 정시 모집은 줄이고, 논술과 심층면접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세 번째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직접 전국의 현장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던 것인데, 이런 우려입니다.

실제로 논술이나 심층면접이 본고사화할 우려가 있다고 현장 교사들 70~80%가 생각하시는데, 이 점 관련해서 이번 서울대 입시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우리 부총리 내정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래서 교육부에서 서울대학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것이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것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마 서울대학도 서로 대화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글썬요, 이런 말씀은 제가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대학들이야 서울대학 아니라 어느 대학이라도 우수한 학생을 뽑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서부터 가정환경에 의한 학력 격차가 나는 것이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학 들어가는 단계에서 그때 당시의 학력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사회 정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역대 정부가 대학들을 향해서 변별력을 낮추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그동안의 역대 정부의 문제는 대학에 그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자유경쟁을 시켜도 될 만한 여건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걸 역대 정부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외람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유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후보자께서는 평생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고 또 아마 직간접적으로 그동안 입안하신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 봅니다. 마는 평생학습도시가 한 57개 지역으로 늘어났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관악구를 포함해서 전국에 57개 그리고 도시 저소득지역의 아이들 교육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선정과정에도 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마 이걸 제가 알기로는 직접 기안하셨을 텐데, 저소득층 지역인 관악구·동작구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300명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멘토링을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제가 여러 해 지도했던 학생들입니다.

○유기홍 위원 이런 평생학습과 교육복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한마디 말씀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러한 제도를 아주 확실하게 세움으로써, 아까 평준화 얘기도 나왔지만 고등학교와 대학 관계에서 아무래도 확실성이 있는 부분을 풀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고맙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민주당동당 최순영입니다.

먼저 예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감사합니다.

○최순영 위원 후보자께서 그동안 써 왔던 여러 글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9월 5일 교육혁신위 주최로 국제회의에서 발표 예정되었던 글을 기반으로 해서 후보자에게 교육철학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가 주장하는 교육정책의 긴 안목의 필요성에 학교 교육의 중심에서 평생교육 중심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주의적 위험성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한국 교육의 근본의 문제는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 인한 교육의 경직된 획일성과 교육 투자정책의 실패로 인한 교육 여건의 빈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최순영 위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후보자께서 국가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나쁜 것은 사실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바다 이야기’ 같은 사행성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실 규제를 오히려 풀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최순영 위원 교육에 있어서도 규제가 풀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빈자리를 서울대 중심으로 한 학벌 권력과 교육시장주의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오히려 학력주의가 강화되고 교육의 양극화가 확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등록금 상한규정을 풀어 버린다면 자립형 사립학교는 결국 귀족학교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대학의 입시정책에 대해서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 버린다면 대학들은 대학별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실시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도 인정하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질의 다 하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학들 속내는 사실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학생을 뽑아서 자신들의 대학을 서열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의 문제는. 따라서 국가의 통제가 모두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 통제하고 어떤 지점에서 자율성을 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제는 교육에 있어서 시장주의적 지향이 강화되는 것, 그다음에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 서울대 중심에서 학벌주의의 문제를 강화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부패·비리사학 문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 조치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통제 혹은 지원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은 학교 운영권자의 자율이 아니고 학교의 구성원—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국가의 통제와 자율성의 보장을 어떤 기준에서 생각하시는지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최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국가주의적 통제를 계속 줄여가야 한다는 것은 제 일관된 주장입니다. 다만 인용하신 그 글은 제가 ‘20년, 30년을 놓고 보자. 그래서 과거의 20, 30년은 이랬는데 앞으로 우리 20, 30년을 놓고 보면 어디로 갈까?’라는 관점에서 쓴 글입니다.

물론 국가의 그런 것을 줄이면 아무래도 시장의 자본이 영향력을 발휘할 위험성도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성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전적으로 그것이 지배할 때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정부의 권한을 좀더 많이, 교육 관련된 많은 단체들, 시민단체 그런 데서도 그것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도 있고, 교원단체·학부모 단체들도 나누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교육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의 역량을 확대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국가가 거의 결정하고 관리했던 것들을 그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도록 하고……

학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자율화’ 이렇게 하면 꼭 사립학교 경영자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립학교 속에는 교수·교사도 있고, 사무직원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권한, 자율성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사립학교법을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딱 부러지게 대답을 조금 참는 것은 지금의 논의는 꼭 경영자 대 이것의 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나라 교육부장관들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사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한마디로 공교육의 실패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렇지요? 입시정책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말하자면 공교육 전체에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것들과 그것에 적응하고자 하는 대학과 입시제도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서 정확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 정책의 문제가 있는 한 사교육비는 줄어들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입시정책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공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특히 생애 초기 단계의 교육을,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소외집단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순영 위원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경숙입니다.

내정자께서 “사학 이사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인은 좀 곤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좀 전에?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정도의 차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다 전적으로 지배한다면 문제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학과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겠지요.

○이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특정 정당의 많은 분들이 이사장이나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광명진성학원 이사장은 한나라당 광명시장 후보자였고요, 대구외대의 이사장은 한나라당 16대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고, 경주대도 역시 한나라당의 16대 국회의원 하셨던 분인데, 이런 사학들이 지금 많은 문제점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한나라당의 16대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들이 문경대라든가 성균관대, 또 죽장학원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정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이사를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또 사학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없애든가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여서 정치적 중립성을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한 부분을 가지고 보면 그런 것은 이경숙 위원님 말씀이 맞고,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충분히 세워야 하고, 다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하나는 사립학교, 사립대학들이 매우 다양한데 그것을 하나의 법으로 관리하려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대체로 다른 나라들은 사립학교들이라고 해도 그것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니깐 그런대로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의 법으로 하려고 하니깐 문제가 있어서 저는 혹시라도…… 저는 과거부터 그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사립학교 관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어떻게 유형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관리체제를 갖추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연구도 하고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앞으로 특정 정당과 그다음에 정

치적 중립성의 문제는 또 고민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내정자께서는 2002년에서 2003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16개 대학 중에서 14개 대학을 인가를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1997년도에는 한 17개가 인가가 되었고요, 1998년도에 12개가 인가가 되다가 이제 줄어들다가 2003년에 14개로 인가가 났는데 인가난 것이 문제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14개 학교 가운데 6개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었고, 특별히 서정대학 같은 경우가 심각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설립자 및 운영자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이사장과 학장 내정자가 그대로 되었고요, 또 재산 출연자인 이사장은 불과 1년 전에는 ‘종합소득세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었는데 그다음 제출할 때는 연평균 37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900만 원 정도였던 이사—이사장의 아들입니다—는 연평균 87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통과가 되었어요. 여섯 군데가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통과가 되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인가가 되고 나서도…… 그러면 잘되었느냐 하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었습니다. 아시아대 같은 경우에는 전임 총장하고 부총장이 금품수수로 구속이 되었고, 대구외대는 심사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심사위원장이셨던 위원장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다른 제도적인 문제로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가가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심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소위 준칙주의, 그리고 대학설립 심사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들이 보니까 너무 뭐라고 할까요, 철저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대개 소위 정량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정성평가, 심사위원들 각자가 전문가들인데 그들의 견해를 반영할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서 그 견해에 아마 몇 군대를 실격시켰더니 그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법에 맞게 했는데 왜 우리를 실격시켰느냐?” 해서 소송상태에 있었고 그 소송에 이겨서 다시 또 여기에 신청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설립심사 위원장으로서 설립준칙주의에 입각해서 채점을 매겨 가지고 인가를 했다는 그런 거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위원회의 기능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정책제안을 붙였습니다. ‘준칙주의에 문제가 있다.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다……’

○이경숙 위원 설립준칙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모르시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설립준칙주의란 게 뭔가 살펴봤더니 1995년도부터 대학을 특성화하고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요건을 굉장히 완화를 시켰어요. 뭐만 봤느냐 하면 네 가지 정도만 봤지요. 교사라든가 토지, 몇 가지 정도만, 기본요건만 통과되면 다 통과시키는 것으로 되었는데……

대학설립준칙주의 제도를 만드는 데 내정자께서는 참여를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이름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시기에 ‘대학설립에 대해서 우리 교육제도의 전체적인 구조가 그냥 억제로만 가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나갔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의 설립을 조금 완화하면서 그들 간의 경쟁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때 당시 교개위의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 심사규정 몇들을 만드는 것이 현실에 좀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것을 고쳐라’라고 하는 정책제안을 그 보고서 뒤에 달았고 그 뒤로 교육부가 다소 좁고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우리 내정자께서 너무나 내용을

잘 아서 가지고 제가 발언할 기회가 없는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죄송합니다.

○이경숙 위원 이 이후의 것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30여 분 후보자 중에서 당당히 교육부총리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송구스럽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동안 내정자께서는 사범대학교에서 교육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석사·학사 교육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수활동에서 한국평생교육학회회장,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장—초·중·고 교장, 장학사 연수지요—그다음에 교육개혁위원, 1차 때. 즉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해서 진력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저서라든가 기고문, 논문에서 교육 본질을 잘 피력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장관내정자의 저서, 바로 이 ‘교육생각’에 대해서 전부 다 읽어 보았습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교육철학, 그다음에 본질, 소신, 이것이 저와도 굉장히…… 제가 논하는 것, 또 주장하는 것과 너무 맞는 것을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이렇게만 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교육의 패러다이스가 아닐까 이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참 희망을 갖고 정말 분명하고 당당하시면서 소신과 철학을 피력하고 폭넓게 여러 가지를 겸비하신 교육전문가구나 해서 희망의 빛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지명 전에 대통령을 만났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부총리 지명 이후에 지난 40여 년간 후보자가 지닌 교육철학과 배치된다는 거, 이러한 것의 지적에 대해서…… “학자의 자유 견해와 그리고 정책 추진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이것이 저는 볼 때 장관이 되면 현 정권에 코드를 맞추어야 되는 건

가, 또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버릴 수 있다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제가 말하자면 신문 이런 데 내는 언론식 말을 할 줄 몰라서 아마 그런 게 있는데, 신문 보도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요지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학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만약에 장관이라는 자리에 가면 자기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조율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인으로서의 주장이 그대로 정책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투의 말을 하고자 한 것인데 제가 표현법이 좀 잘못되어서 그랬는지, 그런 것입니다. 소신을 꺾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신대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숙 위원 물론 하신 말씀의 뜻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장관으로 가시면, ‘내 뜻을 그렇게 관철하는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의 진정성과 정직성 이것 교육의 기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맞지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책 안에서 피력했고 그것은 저도 평소에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신이 옳다고 하면 그 정책 책임자, 따라서 정권의 책임자, 대통령이나 이분에게 가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과감하게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물론 그렇지요.

○김영숙 위원 그것은 동의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장관 자리에 계실 때는 그렇게 학자 때 소신대로 펼쳐 보이시겠다는 이런…… 그야말로 저는 생각하기를 열사적인 정신, 소신 이것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오

늘 오전에 조금 말씀드린 대로 제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런 말씀은 제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소신은 여전하고요.

○김영숙 위원 시간 관계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내용을 제가 보면서 바로 그 여러 가지 철학이 담긴 소신과 그다음에 답변서의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면답변, 후보자께서 작성하셨나요? 저한테 제출한 것 말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워낙 많고 그래서, 또 각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비슷한 것들도 그중에 있었고 그래서, 되도록 제가 하느라고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소신과 철학을 보면, 교육정책 현안들입니다. 그리고 교육 안목, 철학, 소신…… 여기 후보자께서 피력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서면답변으로 받은 것입니다. 보면 이 철학에 대해서 굵힌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인한 것이……

자세한 것은 시간 관계로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평준화 같은 것도 학교 간 학생 질적 수준 균등화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전국적 학력 격차가 크면 평준화 정책의 실패를 자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신입생 강제 배정정책이다, 그리고 한국 학교확일성으로 수월성, 평등성 모두 죽었다, 이것 평준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 공개, 말씀드립니다. 총점 정보 공개 안 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 엄청난 분노·혼란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수험생에게 자신의 상대적 위치 알려주지 않는 것은 눈 감고 뛰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르쳐 줘야…… 눈 뜨고 뛰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르쳐 주라는 것……

그런데 서열화 부작용 우려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에 대해서도…… 자사고대책협의 회장을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자사고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양화…… 확일성을 극복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건이 되는 사립학교들은 원하면 전환해 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그 뜻이 아닙니다, 제 서면에서는.

그리고 기여입학제가 있습니다, '3불정책' 중의 하나. 기업, 단체, 개인들의 대학 지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 제한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답변에는 '위화감 조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뜻으로 해서……

그 외에는 자세하게, 지금 시간 관계로 해서……

그래서 학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철학, 학설 이것을 굽히고 내던진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김영숙 위원 그렇지요? 안 되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학자이기를 포기하는 길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확실한 대답인데 앞뒤가 맞는 것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생각'은 이 시대 갈망하는…… 이 책 속에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權哲賢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좌우간 그렇게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어떤 것들은 특정 사안에 관해서 쓴 내용들이고요, 또 평준화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쓴 글을……

○김영숙 위원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길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제 책을 다 봐도 그것은 확실히 저는…… 그것 기본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시간 관계상 답변 중지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고맙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다음은 정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주 위원 열린우리당 노원갑 출신 정봉주 위원입니다.

이제 학자가 아니시지요? 내정자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런데 그렇다고 '학자'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겠습니까?

○정봉주 위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알고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 교육부총리 내정자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전 국민 4800만이 울고 웃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열심히 조심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지난 24일 단임하고 끝난 김병준 부총리께서 결국 논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지만 언론의 표적이 되면서 24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작년 1월에 이기준 부총리가 자녀 국방 문제, 국적 문제…… 72시간 만에 낙마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4800만이 다 교육 전문가입니다.

오전에 "사학법, 국회에서 논의되면 재개정 필요가 있다"면서…… 애매모호한 답변이 10시 51분에 대한민국 전 언론을 뒀어요. "신임 부총리, 사학법 재개정 필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한 것을 모든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것과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지명된 지 얼마나 되셨지요? 15일 되셨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며칠 됐습니다.

○정봉주 위원 9월 1일에 했습니다. 15일 동안 대한민국 언론환경이 바라보고 있는 교육부 수장의 자리를 좀 아셔야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런 것은 계속 배워 가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언론에 그렇게 나왔다…… 국민은 어느 것을 들습니까? 말 한마디에 오해가 있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이 울고 웃습니다.

그리고 사학법 재개정이 의원입법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어도 틀렸습니다. 세상에 재개정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개정이지요.

언제 시행되었지요, 이것이? 12월 9일에 통과되고 시행된 것이 언제입니까?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두 달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올라오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국회에서 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정봉주 위원**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재개정하면 그 개정된 내용을 갖고 행정부는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봉주 위원** 자, 7월 1일 이후에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관 개정해야지요? 정관 개정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립학교에서. 정관 개정 들어가고 있는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봉주 위원** 아직 못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정봉주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자, 이것이 오늘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전체 298개 학교 중에서 이미 개정 인가된 학교가 20개, 검토 중인 것이 9개, 신청한 데가 29개, 해서 개정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데가 20%입니다. 그리고 변경안 마련을 위해서 이사회 소집을 해 놓고 이사회 준비를 하고 있는…… 오늘 저녁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하고 있는 학교가 75개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45%가 사립학교법 개정된 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언론보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시 개정된다는데 괜히 개정했네’ 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교육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감사원의 일제감사가 시작된 이후에…… 6월 말까지 종합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교육부 감사인력이 지원 나갔습니다. 그것 이외에 교육부 30여 명에 가까

운 감사반에서 사학 감사한 결과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제가 아직 구체적인 업무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정봉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근 9개월 동안 문제가 되고 있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 단 한 학교도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16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비리 사학, 지금 무풍지대입니다. 비리 사학이 9개월 동안 사학법 재개정 문제 갖고 정치권에서 논란하고 있을 때 발호와 창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재개정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정은 입법부 소관입니다. 행정부는 개정이든 재개정이든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지금 보세요. 50% 넘는 학교들이 사학법 수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음 주 지나고 9월 지나면 이것이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갑니다. 정치권만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오랜 노학자이고 존경받는 학자시기 때문에 내정되었을 때 반대했습니다. 논리가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학자로서의 위신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봉주 위원** 말 그대로 이슬도 피해 가던 안락한 위치에 있었던 분입니다. 교육계는 피 튀기는 전쟁터예요. 이해집단들이 얼마나 목소리가 크냐 하면, 제가 ‘고성 스피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언론은 말 한마디가 언제 어디에서 실수가 나올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받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내정자의 교육철학을 보겠습니다.

‘평준화-고교 획일화 조장, 수월성·평등성 모두 실패’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내용 말씀하신 적 없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평준화가 아니고, 평균화가 고교 획일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는 했고, 수월성·평등성 그것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러나 사실대로는 다 제가 한 얘기입니다.

○정봉주 위원 이 낱앙스가 평준화 정책의 전면 재고 내지는 실패로 귀결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지 않습니다.

○정봉주 위원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얘기가 곧 평준화를 없애야 된다고나 그것하고는 전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평준화는 지켜 가야 된다고……

○정봉주 위원 다음으로 ‘사학의 자율권 보장, 자립고 전환 자율 확대 필요하다’, 즉 자사고를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로 국민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제가 그 밑에 있는 것은 여러 해 전에 교육부와 서울시가 자사고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맥락에서 신문에 쓴 얘기입니다.

○정봉주 위원 내정자의 교육철학에 대해서는……

○委員長 權哲賢 정리해 주십시오.

○정봉주 위원 예,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경기 부천 원미갑의 임해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지난 10년간 저의 석사·박사 과정의 지도 교수였고 저에게 교육이 무엇인지, 또 정치인으로서 제가 첫발을 내디딜 때도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시고 오늘날의 저를 만드시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교육부총리로서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점이 대단히 안타깝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교육을 위해서 함께 가는 비판적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새로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정자께서는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서 언론에

발언을 하셨습니다. “학자로서의 소신과 정책을 집행하는 부총리로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것의 한 사례로서 “평준화 정책은 보완은 되어야 하지만 기본틀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대체로 열린우리당 위원들께서 그 소신이 현재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 정책과 어긋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굉장한 우려와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께서는 그 소신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면서, 다만 그 소신을 접지 않기를 바라는 충고와 격려의 이야기를 담고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간 내정자께서 걸어오신 소신의 길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소신을 접지 않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해서, 그리고 특수목적고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여건과 능력이 되면 사립학교는 진정한 사립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초·중·고등 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하면 시·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평소 소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수목적고를 만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많고 또 지방에서의 요구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있는 부천지역에서도 곧 특목고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적어도 7~8개의 특목고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목고를 만들려고 하면 교육부에서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지역교육청에서 자유롭게 하도록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우선 그 문제는 전체적인 판단하에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임해규 위원 그 말씀은 특수목적고가 너무 많거나 이런 판단이 들면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게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면 그 학교의 여건과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좀 바뀌신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아
닙니다. 역시 학자로서 글쓰기와 이제 앞으로 정
책적인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 간에 줄
차이도 있고, 더러 이게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
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
는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방침입니다. 그
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들을 어느 학교를
가도 자기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면 그 전제하에 자기가
가까운 거리의 학교를 갈 수 있게 해 주니까 좋
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 평준화 초기에는 어떤
학교를 없애기도 하고 공동 학군도 만들기도 했
는데, 그 뒤에 역대 정부들이 그 후속조치를 사
실은 제대로 못 한 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부라
도 죽 제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
평준화가 좀 경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평준
화가 경직되었다고 그래서 무슨 특정 정부가 아
니고 지난 70년대 이후로 온 것이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리고 학교별로 그것을 하게 하려면 다양한 프로
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못 만
드니까 그것 때문에 특별한 요구를 가진 사람은
자꾸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요. 그러므로 우리가 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 특별한 학교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것은 항상 그 상황과 이것에 따라서 결
정할 문제지 무조건 넓혀 가면 좋다든지, 무조건
하면 안 된다든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해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교 학력고사 도입에 대해서 굉장한 지론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
지 의미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는 수능이
대학 중심의 시험이고 그것도 획일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학생을 선발하는
가장 기초자료가 되는 고교 내신의 공신력이 떨
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교학력제를 당장은 아니겠지만, 1년 6개월의
기간은 아니겠지만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
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채택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임해규 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바로 얼마 전에 그만두신 김진
표 교육부총리께서 시작하실 때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의 획일성과 경직성
을 극복하고 또 세계적인 교육 기준에 맞도록 하
고자 하는 노력을 했고, 그에 맞춰서 대학 자율
선발권도 이야기를 했고, 또 특목고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시각을 가졌습시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소신을 접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
고, 마지막으로 특목고의 모집을 광역자치단체
로 제한하는 것으로 마지막 교육부총리 자리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세간의 평가는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 내지
는 않습니다. 있는 사실을 해석하고 확대하지요.
그런 면에서 소신을 접었다고 하는 평가가 저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정자께서 소신 때문에 지금 여야가 다
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소신이고 본인의 생각과 다른 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소신을 접지 않고
소신대로, 소신의 기초를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
게 사랑받는 그런 교육부총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감
사한 말씀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경기 남양주갑 출신 최재성 위원
입니다.

BK21,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연구비 38억
원의 1단계 BK21 사업단으로 선정되어서 하신
적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최재성 위원** 사업 수행 3년차에 이루어진 중
간평가에서 방만 운영 등을 이유로 인문·사회 3
패널 교육학·사회학·아동학 분야 5개 사업단
중 꼴찌를 기록해서 중도 탈락한 사실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이때 전부 대형 121개, 소형 316

개 사업단 중에 탈락한 사업단이 대형 4개만 탈락했는데 그중에 김신일 후보자께서 참여하신 사업이 탈락했습니다.

교육부 평가가, 당시 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 사업단에 참여했던 교수들은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라고들 아마 교육부에 의견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특별히 다른 정치적 사유가 있었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게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평가를 통해서 탈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대학설립심사위원장으로 2002년도에 활동하신 적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최재성 위원 상설기구입니까, 비상설기구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것은 매년 대학설립 심사할 때마다 교육부가 선정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기구 자체는 상설기구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것 자체는 그런데 사람은 늘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성이 없으니까 적어도 절반씩은 유지를 시켜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때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받으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것은 교육부가 예산 배정을 하지요.

○최재성 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랬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회의수당, 좌우간 그 필요한 비용은 교육부가 배정한 그 돈을 가지고 썼습니다.

○최재성 위원 지난번 김병준 부총리, 전 부총리지요. 그때 소위 말해서 우리 학계에서 개념도 없었고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신조어가 나왔었습

니다. ‘논문의 자기포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탄에 맞아서 김병준 부총리가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학계의 하나의 관행으로 치부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새롭게 도덕적 잣대를 높여서 특히 공직자를 엄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잣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양론이 있었고, 그것이 표면화된 계기였습니다.

후보자께서 당시 설립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실 때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종합 보고서로 ‘대학 설립인가 타당성 조사연구’, 2003년 9월 개교 예정, 2003년 초 개교 예정 2개를 했는데 이것은 용역비용이 책정된 보고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제가 알기로 용역비용이 아니라 교육부가 하는 일인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아마 돈을 위원장 이름으로 만들어서 썼다고 들어서 그때 심지어 “괜히 위원장 나중에 종합소득세 때 걸리지 말게 잘해라” 이런 얘기도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설립심사위원장으로 이 보고서를 제출한 책임자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리고 이것은 3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까?

○최재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서론, 본론, 결론도 없고, 설립심사위원회의 각종 서류, 그다음에 설립 신청한 대학, 거기에 대한 평점 매긴 것, 쉽게 말해서 설립심사위 활동일지입니다. 이것에 3000만 원의 국고가 낭비가 됐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것을 만드는 데 그 비용이 들은 것이지요. 교육부가 요구한 것은 “이렇게 신청한 대학이 있는데 이리이러한 기준이 있다. 어떠냐?” 해서 열몇 명의 위원들과 전부 현장을 다니면서 만든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보고서입니다.

○최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회의수당이 나오는 경비는 교육부 예산으로 충당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령합니다.

○**최재성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도의 소위 말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3000만 원이……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같은 그것인데 보고서를 하면서 아마 교육부가 그것을 연구비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3000만 원을 지출했고 그것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교육부가 일을 시키는 것인데……

○**최재성 위원** 그것이 적법했다고 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일을 시키면서……

○**최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적법한 절차였다고 보느냐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부가 다 관리했고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최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것이 적법했는지 나중에 좀 여쭙도록 하겠고요. 제가 보드(board)를 준비해 왔는데 제가 후보자 논문을 무작위로 30개를 추출해서 봤는데 10개 정도 논문이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어떤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또 학술지에 실을 수도 있고, 유형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할 정도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냐는 인상이 짙습니다.

예컨대 2004년 1월 ‘한국사회 변화와 교육개혁의 과제’, 2006년 9월에 ‘한국의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이것 다른 논문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수들은 학술논문으로 쓰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 여기저기 초청받아서 강연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보고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제가 강연자로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인데 그 주최자가 비슷한 주제로 저에게 요구하면 결국 같은 예로 어떤 경우는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최재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것을 어디에서 내가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인용을 했다라든가 각주를 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저희들 상식으로는 학술논문이 아니면 강연자료는 굳이 거기다가 노트를 달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학계의 관례이고 그냥 그렇게 그것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그러면 학술대회에 제출한 논문하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하고는 어떤 학문적 예의라든가 각주를 달거나 인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략된 채 그대로 발표되어도 상관이 없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아닙니다. 정식 학술지에는 아주 엄격하게 출처와 이것을 다 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게재를 해 줍니다.

○**최재성 위원**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까.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번 김병준 부총리 인사청문회 때와는 달리 상당히 정책적이고 비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오후 시간 시작할 때에, 오늘 대부분의 위원들이 소신껏 철학을 껴였느냐 바꾸었느냐 이게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TV를 시청하는 국민들은 어떤 소신이 있었는데 뭘 어떻게 바꾼 거냐, 안 바꾼 거냐에 대해서 지금 아마 상당히 궁금할 것입니다. 한 5분간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오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權哲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 오전회의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 대부분이 소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소신이 흔들리느니, 소신이 변했느니, 꺾였느니, 그렇지 않느니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후회의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께서 소신 문제와 관련된 것을 한 5분 정도 이야기하시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TV를 시청하시는 국민들도 무슨 소신 문제를 가지고 하는지 어리둥절한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委員長 權哲賢** 잠시만, 5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각자의 전 생애교육 가운데 한 단계가 6세부터 20대 중반까지 학교교육입니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교육을 위한 무기인 기본학습능력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까지 계층배정의 영향을 크게 받아 계층 간 격차가 생겨납니다.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입학시에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출발선상에서, 누구는 50m 앞에서, 누구는 50m 뒤에서 출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격차는 말할 필요도 없이 초등학교 6년 동안 증폭됩니다. 능력별·재능별 지도가 약하고 특히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조치가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뚜렷이 다른 우리 학교의 한 특징은 자동진급입니다. 학년 진급은 나이 먹듯 1년만 지나면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결국은 기본학습능력의 부족이 만든 학습결손은 또다시 확대됩니다. 이 상태가 중학교에서도 계속됩니다.

이제 학력격차는 많이 벌어져 있는데 경쟁시험으로 고교입학이 이루어지니 입시경쟁이 과열됩니다. 문제는 과열경쟁도 과열경쟁이지만 계층 간 학력격차가 그대로 입학에 반영된다는 문제 또한

사회정의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70년대 초에 도입된 평준화는 입시과열을 막는다는 목적과 함께 분명하게 표명되지는 않았지만 계층격차로 증폭된 학력격차를 인위적으로 축소시켜 보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조치는 당연히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군별 선발로 학군 내 우선배정이 좋으나 나쁘냐보다 이러한 제도가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원인을 어떻게 제거 내지 축소시키려는 것이었으나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평준화를 도입한 지난 30여 년간 유아기 기본학습능력, 학교 내 능력별·재능별 교육이 부실한 채 왔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능력별·재능별 교육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매우 불충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입시에 대한 조치가 90년대 후반부터 강하게 강화됩니다. 현재의 내신등급화, 수능의 등급화, 고교등급화의 금지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 계속되고 더욱 첨예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원인, 즉 계층배정이 학력결정을 막거나 축소화할 조치가 여전히 그 논의가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제로 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평준화의 강화론과 평준화의 완화론은 각자의 인식 차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우선적인 과제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유아기와 초등학교 단계의 기본학습능력 개발, 능력별, 즉 저능력자와 고능력자에 맞는 다른 교육, 재능별 교육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사, 학부모, 대학들이 여기에 모두 협력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아마도 한 5년쯤, 길어도 한 10년쯤이 되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입학시험에 다소간의 경쟁을 도입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전이라도 유아기와 초등학교기의 교육이 개선되는 것만큼 점진적으로 대학들에게 좀더 그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리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평준화는 마치 댐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막는 것이 댐이지만 무조건 댐을 높이 쌓는다고만 해서 댐의 기능을 다하는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댐이 그렇듯이 댐은 항상 보조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넘칠 경우에는 보조수를 통해서 댐 물을 흘려보냅니다. 일반 학교들이 능력별·재능별 교육을 제대로 한다면 말하자면 보조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들이 제대로 능력별·재능별 교육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큼 특별학교의 요구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 특목고나 외고나 특수학교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일반학교와 다른 유형의 학교들은 각 학교 단계에서 제대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것이 좋으나, 좋은 것이 좋으나?’ 일반 학교가 다 제 기능을 한다면 그런 학교들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학교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면 아마도 그에 관한 요구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길은 일반 학교들이 그 정상적인 교육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댐을 제대로 보강하고 좋은 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오전 시간에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제 답변이 여러 가지로 불확실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에 의도하지 않은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개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그것을 존중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짧은 시간에 소신을 다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마는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더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먼저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우선 김신일 후보자께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고 그래서 부처에서는 여야가 통과시킨 법률대로 따르면 된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도 발의권이 있습니다. 입법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후보자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가 만약에 집행만 하는 부처라면 여야에서 법률 통과되는 대로 하면 되는데, 파장이 덜한데 정부에서도 입법권이 있습니다. 입법 발의할 수 있고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2004년도에 발의 형태는 의원입법 발의로 했지만 당정 간에 3개월이 넘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정책의 부처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부처는 무조건 따라만 가는 게 아니고 입법발의 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평준화의 보완, 수월성 교육과 보편화 교육이 양 날개로, 두 개의 수레바퀴로 가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획일화라고 얘기하는 게 혹시 하드웨어적 측면, 시스템이나 학교체계나 운영의 획일화 이런 것에 너무 천착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교육 콘텐츠의 획일화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셨나요? 예컨대 어떤 학교 유형을, 학교 모델을 개발해서 제시를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입시위주 교육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형태에서 학교 유형이나 운영의 다변화를 통해서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입시위주의 획일화라는 것이 타파될 수 있겠느냐?

저는 후보자님 여러 글을 보면서 느낀 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측면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다양성은 뭔지, 또 아이들이 지금 교육 내용을 가지고 획일화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지, 이 교육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 학교 유형을 다양화한다고 해서, 예컨대 자사고나 특목고를 늘린다고 해서 이런 공교육이 붕괴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최재성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일반 학교가 어떤 상태이나 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지금 정부는 그런 자사고·특목고·외고, 이런 것 외에 대안학교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과거에는 대안학교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정부정책이었지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그러한 대안학교를 인정하고 일반 학교와 동반관계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은 일반 학교 전체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가외의 학교들을 어떻게 좀더 다양화하느냐, 숫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재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역시 유형의 다양화와 연관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짚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PISA나 TIMSS 평가에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능력, 수학, 과학 다 톱 클래스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소위 수월성 교육을 빙자한 입시위주 교육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자사고도 확대해야 되고, 특목고도 확대해야 되는데 PISA 평가에서는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경쟁력권 밖으로 밀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창의력과 잠재력이 부족합니다. 각종 통계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양대 통계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같은 수능점수대의,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지망한 아이들이 2학년 넘어서면서부터 강남에 있는 아이들보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 지역균형 선발로 선발된 아이들이 훨씬 더 대학에 가서 적응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통계들이 주는 의미는 기존의 입시위주 교육이 진정한 경쟁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사고를 늘리느냐, 특목고를 늘리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기존 교과에 대한 콘텐츠를 바꿔내는 것으로부터 교육개혁은 시작되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입시제도도 바뀔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내신반영 비율 아무리 높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변별기준으로 작동하지 않고 오직 논술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학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쓰신 글은 대학 주도의 수

능이라든지 고교학력고사 같은 것을 부활해서 고교 중심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외형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마는 그 학력측정의 방식이 무엇이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뒷받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 콘텐츠의 대대적인 혁신 없이, 또 창의력·잠재력 중심의 교육 없이 학교 유형을 다양화한다든지 자사고를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외피에 천착한 소모적 논쟁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요한 부분을 빼놓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지금 최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그야말로 기본방향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들이—학생들의 자기 동네에 있는 학교들이—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능력이 높은 애는 높은 애대로 낮은 애는 낮은 애대로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그동안 30여 년간 우리가 다 같이 지켜 봤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점에서 최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최재성 위원** 지금 제도권 내에 그런 모델이 있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러한 모델은 자꾸 만들어야 되겠지요. 논의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듣기로 최 위원님께서도 그런 모델에 대해서 제안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외국의 차터학교랄지 독일의 무슨 학교랄지 터키의 무슨 학교랄지 여러 가지 유형의 학교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시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제 생각은 여전히 가능하면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그 학교에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으나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겠다, 교육부의 정책은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치중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재성 위원** 학교 유형의 다양화라든지 자사고·특목고의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라든지 이것

보다 내용적인 교육혁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물
론입니다.

○최재성 위원 그리고 현재 그러한 전범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교과서와 같은 전범들을 세우는 데 진력하시겠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옳은 말씀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 질의 중에 논문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일부분 맞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또 다른 학술대회에서 할 때는 각주나 인용표시를 안 해도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저널이나 학술지에 실었을 때 그때는 반드시 각주나 인용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격된 흔적들이 몇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아, 그렇습니까?

○최재성 위원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번 김병준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논문 관리하는 데 좀 순진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님 논문 한 30편을 보면서 느낀 것은 실질적으로 학자적 소임을 충분히 다했다고 해석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 과정에서 조교가 했든 뭐가 했든 의도적으로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은폐한 점들도 보인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술대회에서, 학술지 게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 이런 것들이 의도적이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관행이라면 관행대로 고쳐야 되는 것이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로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앞으로 교육부 수장이 되신다면 이런 관행에 대해서 국민들의 높아진 도덕적 기준만큼 관리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산문제하고 몇 가지 더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이 73년생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강동구 암사동에 강동시영아파트를 2004년 3월 26일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당시 13평형의 가격이 2억 7000~8000으로 시세가 형성돼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아마 그 애들이 살 때는 그렇게가 아니었을 겁니다.

○주호영 위원 주변에 중개소에 다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재건축해서 현재 시가는 24평형으로 바뀌어서 3억 9000 정도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시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애들이 아마 이렇게 일정기간마다 돈을 내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현재 금호 1차 아파트 전세 안에서 살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 전세보증금이 1억 2000쯤 되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아마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이것을 합치면 대략 4억가량이 되거든요. 2억 칠팔천에 1억 2000-4억가량이 되는데, 지금 소득 근거를 살펴보면 99년부터 송일도시개발에 근무했다고 되어 있는데 월급은 최저수준이고 이 기간에는 대학 건축과 석사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캐스 건축사사무소에 대리로 근무했다고 하는데 이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전혀 낸 기록이 없어

요.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아, 그렇습니까?

○주호영 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최근 한 2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는데 연봉이 24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주호영 위원 물론 자부 되시는 분이 교편을 잡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런 소득수준 가지고 4억 되는 재산을 본인의 자력으로 형성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오해가 왜 생기느냐 그러면 대부분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장남에 대한 고지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후보자께서는 고지거부를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지거부를 하지 않고……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우선……

○주호영 위원 잠깐만요, 정식으로 임명이 되면 재산등록을 할 텐데 고지거부를 하지 않고 제대로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지거부를 그대로 유지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우선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서 저도 이번 기회에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그 애들이 상당한 은행 용자에 뭐에 빚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좋은데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면……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러니까 재산이 아니지요.

○주호영 위원 등록을 하게 되면 빚이 얼마지 다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취지가 본인이 부당한 재산을 얻었는지도 검증이 되지만 자녀에게 부당하게 많이 증여 형식으로 재산을 내려줬는지도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고지거부를 하지 않고 말끔하게 등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제가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대학교수 봉급으로 그렇게 많이 벌 수도 없어서 줄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물어보니까 고지는 꼭 안 해도 되는 것이라 그러고 자녀들이 제가 최초로 공직생활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

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고, 특히 제 며느리아이는 초등학교 교사여서 특히 가족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아주 어려워합니다. 제가 그래서 안 해도 된다면 안 하려고 합니다.

○주호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지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기하라고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주위에 그 점에 관해서 혹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개별적으로라도 채무가 얼마 있고 이런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라도.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채무는 아마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주호영 위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주 위원님께는 아직 안 가 있습니까?

○주호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주호영 위원 그리고 죄송하지만 부인 되시는 분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직업 생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호영 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얼마 전에 그만뒀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현재는 직업이 ‘무’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어느 주식 회사에, 무슨 코리아라는 주식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서류상으로는 지금 계속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아마 그쪽에 연락이 안 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좌우간 얼마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것은 제가 압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내고 있으면서 보험혜택은 다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글썽요, 보험…… 좌우간 얼마 전에 그만뒀는데 그것이 왜 공단에 연락 안 됐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호영 위원 얼마 전이 몇 달 전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아
마 한 보름이나 얼마 되지 않나, 보름이나 한 한
달 그 정도라고 봅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보름이라면 후보자가 국
무위원후보자로 내정되고 난 다음에 그만두게 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리고 보니 진짜 한 20여 일 25일, 뭐 좌우간 그
렇습니다. 8월 중 언제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자, 좋습니다.

시점을 후보자가 국무위원후보자로 내정되고
난 뒤에 그만뒀습니까, 그 이전에 그만뒀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8
월 언제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아니요, 8월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정 시점의 전후로 따져서 답변을 해 주
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전입니다.

○주호영 위원 전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주호영 위원 다음에,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마는 지금 문제가 되어서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학교에 사실은 임시이사라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특정 정파와 가까운 사람들이 대거 학교에 들
어가고 있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주호영 위원 그래서 사회 일각에서 사립학교
법의 개방형 이사제도도 여전히 이런 것으로 될
것이 아니냐, 왜 특정 정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꾸준하게 임시이사로 들어가느냐 이 점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주호영 위원 지금 후보자는 답변에 본인이 이
점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답변을 피해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답변하시기로는 질문사항이 많아서 실무
자들이 답변했다고 하는데 실무자들은 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주호영 위원 이론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사
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임시이사를 파
견한다고 그러는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열린우
리당 사람들만 눈에 보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제

가 한 일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기서 임시이사 파견할 때 지원을 받아서 파
견을 합니까, 그렇지 않고 이 사학분쟁조정위원
회에서 직권으로 파견을 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죄
송하지만 여하튼 아직 제가 그 일에 관여한 일이
없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아니, 관여할 일은 없겠지만 교
육부와 관계되는 일을 많이 했고 임시이사들이
어떤 사람이 간다는 문제의식 정도는 가지고 있
었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건 그야말로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주호영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제
가 하도 예가 많아서 대구지역만 특별히 예를 들
었는데 경기대학의 이창복 이사장, 열린우리당
강원도 지부장입니다. 그다음에 총장 이태일, 열
린우리당 상임고문입니다. 경인대학의 이사 송영
길, 현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다음에
덕성여대 총장 지은희, 참여정부, 이 정부에서 여
성부장관을 했습니다. 이사 이석태, 이 정부 들어
서 대통령비서실의 공직기강비서관 했습니다. 광
운대학의 이상철 총장, 선거 출마했던 사람입니
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주호영 위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
론 조선대학 총장까지 했습니다마는 양형일, 지
금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
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지
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주호영 위원 이 경위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 왜 이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이사로 파견되었
는지 꼭 특정 정파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어도 좋
습니다. 모두 다 밝혀 주셔야 밖에서 납득을 합
니다.

왜냐하면 분규 있는 학교마다 그 학교를 실질
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누구의
영향력하에서 임시이사가 온다, 말은 임시이사·
관선이사지만 사실은 분규가 생기고 나면 특정정
파에서 학교를 장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불만과 지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의 정치적 중립성이 깨어지고, 그다음에 사립학
교법의 개방형이사제가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 주장하지만 밖에서는 전부 학교 장악의 일환이라고 다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과악을 못 하셨다면 앞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각 별히 주의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주의해서 살펴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투명하게 하십시오. 왜 이 사람들이 가야 되는지를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학교를 죽 친한 사람들이……

지금 대구에 보십시오. 대구 어느 대학은 지금 이사장, 이사 전부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이 대학을 접수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제발 좀 투명하게 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여하튼 제가 열심히……

○주호영 위원 교육전문가들 보내시고 교육 경험 있는 사람들 보내시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시비에 휩싸이지 않을 중립적인 사람 보내세요. 그것 약속할 수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열심히 챙기고 잘 해 보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이 문제된 임시이사들은 취소하고 다시 제대로 중립적인 사람들로 다 보내세요. 약속할 수 있으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여하튼 제가 내용을 다 확인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드릴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잘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들여다보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대구의 경우는 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낸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돌고 있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아, 그렇습니까?

○주호영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權哲賢 수고했습니다.

교육부의 박경재 실장 있습니까, 혹시?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예.

○委員長 權哲賢 지금 교육부 안에 임시이사추천위원회라는 게 원래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아직 정식출범은 못 했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그러니까 그 임시이사추천위원회가 있고 교육부가 3분의 1, 학교 출연한 사람 쪽에 3분의 1, 학교구성원 3분의 1 이렇게 추천해서 임시이사추천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 옮겨갈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잘 보고하셔 가지고, 아마 후보자께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보고하셔서 이해력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다음은 정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 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갑 출신 정봉주 위원입니다.

부총리 내정자께서 오후 청문회 시작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수장의 자리가 이해단체들의 요구와 충돌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각별히, 그리고 또 언론이라고 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실 때는 각별히 유의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 현재 정관 마련과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정관 개정을 하고 있거나 혹은 준비하고 있는 학교가 132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의 45% 정도, 교육부 수장이 되시면, 이게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45% 정도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개정, 시행령 개정된 것에 근거해서 조속히 정관 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참여정부와 내정자님의 교육철학이나 언론에 보도된 것을 오전에 잠깐 체크를 했지만 대체로 교육정책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을 봐도 학자로서의 소신이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적인 정책에서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 일치를 하는데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이 2008년도 대입개선안입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잘 계시죠?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알고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 17대 국회가 출범하고 2004년부터 2008년도 대입개선안을 만들기 위해서 2년 동안 고생을 한 내용입니다. 2008년도 대입입시개선안의 핵심내용을 보면 내신 반영비율의 확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정자의 교육철학과도 일치하리라고 보는데 수능등급화,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학별 본고사 금지를 통해서 사교육 팽창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중국적으로 개선안을 보게 되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팽창을 방지하는, 즉 내신 중심으로 가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현 참여정부의 의지였었거든요.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정봉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책이 발표가 되면 대학에서 이것을 수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과 협의한 내용인데 이 정책에 대해서 가장 반기를 든 대학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어느 대학……

○정봉주 위원 내정자께서 26년 동안 몸을 담고 계셨던 서울대학이 9월 8일날 입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교육부정책에 정면배치되는 정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표를 가리키며)

보세요. 서울대 입시안의 핵심 내용은 내신 반영을 10% 확대하겠다, 40에서 50%로 늘어났다, 외형상으로는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자, 논술 반영비율을 20% 확대했다, 10에서 30%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50%로 늘렸는데 여기는 기본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94.3점을 줍니다. 자, 50% 반영이니깐 이렇게 해 보겠습니

다. 내신이 가장 나쁜 학생은 47.15를 받고 내신이 가장 좋은 학생은 50점을 받습니다. 편차가 2.85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백분율로 봤을 때.

자, 이게 내신이 반영된 겁니까? 여기는 50%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점수를 94.3점을 줍니다. 50%로 가면 47.15점을 줍니다. 물론 내신 9등급인 학생이 들어올 리는 없겠지만 내신 9등급인 학생이 서울대에 신청을 해도 47.15점을 받습니다. 자, 내신 반영비율 2.85%……

그다음에 논술은 기본점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실질반영률이 60%라고 했는데 많게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97.15%까지 논술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대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서울대는 논술로 들어간다.

논술은 현행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제자를 많이 배출하셨지만 제자들이 가서 논술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교과과정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인프라 구축할 때까지는 기다리자고 하면서 끊임없이 설득을 했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자, 이게 오늘 나온 신문입니다. 보세요. ‘꿀 먹은 교육부’입니다. ‘서울대가 9월 8일날 입장을 발표했는데 대학들 논술 비중 확대, 2008년 새 대입안에 반기, 실종된 새 대입안, 교육부 성토편위기’…… 고교 수험생들은 교육부는 왜 뒷짐만 지고 있냐고 성토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정책에 일치하니까 잘하리라고 하는 데에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전에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좀 실언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1년 반 남은 동안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그다음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서울대에서 저렇게 엇박자로 나가는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우선 명목상의 반영률과 실질반영률이 다른 것이 이 제도가 도입된 20, 3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것은 저도 늘 문제로 제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실질반영률과 명목반영률을 일치시키느냐 이것이 과제인데 아직 그걸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과제고요. 장기적으로는 그걸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리라

고 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실질반영률인데 저것은 정봉주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정봉주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잠깐만요.

부총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이나 이렇게 이 자리에서는 정확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계산방법이 조금씩 달라도…… 제가 계산한 방법은 서울대에서 밝힌 거고, 교육부에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마치 2.85보다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방송에 나가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 내신 실질반영률은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대는 2.85%입니다. 논술은 60%에서 90%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자격시험화되었기 때문에 수능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에 따라서는 수능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60%가 될 수도 있다는 얘가지요.

자, 문제는 내신 실질반영률을 올려라, 그러나 서울대는 내신 실질반영률이 2.85입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가 서울대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실질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서로 대화를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일을 맡게 되면 되도록이면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설득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게, 우리 교육부 수장이 지금 오십번째인데 유형이 한 여섯 개 정도의 유형이 됩니다. 정치·관료형도 있고 교육자형도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자 출신들의 교육부 수장이 제일 단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김신일 교육부총리내정자께서 학계에서 존경받는 노학자로서 성공한 부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2008년도 대입 개선안이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정책에 반기를 든 서울대와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보세요, ‘논술 도미노 현상’이라고 합니다. 서울대가 그러고 나니까 이공계까지 확대되고 연·고대 뒤이어서 계속 논술 비중을 올려 갑니다.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학부모들 난리가 났지요. ‘도대체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논술을 공교육에서 어떻게 대응하란 말이나’, 절대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교사들 설문조사하면 92% 이상이 ‘이것은 본고사의 부활이요. 절대 우리가 대응 못합니다. 교육 양극화를 그대로 재촉하는데 왜 교육부는 손 놓고 있습니까?’ 이라고 항의합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부총리님이 성공하게 되면 대한민국 4800만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실패하시면 대한민국 미래가 실종되고 4800만 국민이 불행해지고 슬퍼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한 부총리가 되기 위해서 서울대가 이렇게 엇박자로 나가는 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고 단호하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대의 지금 정책은 평상시에 교육부총리께서 발표했던 정책과도, 내정자의 소신과도 다 180도 틀립니다. 이것은 잘 아실 테니까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2008년 서울대 입시안은 결국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내신 반영률이 최소화돼서 2.28%, 논술 60%~90%, 논술 도미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대, 고대 다 발표했어요. 최종 발표가 서울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국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이 논술 도미노 현상을 막으셔야 됩니다. 학자의 소신을 걸고 부총리 수장으로로서의 사명감으로 이걸 막으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사교육에 절대 의존하지요. 사교육 팽창됩니다. 입시 부담 폭증하고 학교교육 파행되면서 공교육은, 평생을 주장하신 공교육 정상화는 물거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와, 어떠한 정책으로 어떻게 서울대를 교정을 하실 건지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정봉주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늘 같은 얘기를 했고, 여기서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는데 서울대학 내에서 늘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서울대학이 공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서울대학하고도 이걸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고등학교의 내신에 대

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을 동시에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한 교원단체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내부 연수에서 북한의 역사책을 그대로 인용한 자료를 사용한 것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서 지금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이러한 행태를 교육부총리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전교조의 연수가 학교의 학생들에게 미칠 파급효과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논란도 있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얘기하기 어려운 것은 그동안 교원단체들의 형성과 발전 과정,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 국가가 학교와 교원단체에 대했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학교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교육 내용에 대한 일정한 전문적 자율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문헌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의 논의라고 생각……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정문헌 위원 전교조의 6·15 공동수업안 내용 가운데 ‘옆반 친구가 와서 따지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은 뒤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런 어떤 내용이 공동수업안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 동화 ‘고슴도치와 옥토끼’를 예로 들어서 한반도 분단을 오해에서 생긴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은 인격과 세계관 내지는 역사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주변 강대국이 옆반 친구이고 한반도 분단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에 부총리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문제보다는 말하자면 교사들이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어느 만치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쟁점이겠습니까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보고 그것이 우리가 허용……

○정문헌 위원 아니, 전교조 6·15 공동수업안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주변 강대국이 옆반 친구로 비유가 되고, 간섭하지 말라는 비유가 되고, 한반도의 분단 원인이 오해에서 생겼다, 이게 지금 맞는 판단입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총리후보자께서 교육의 자율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국내외에서 한반도 분단과 관련된 분야에서 많은 연구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자료 수집에 근거한 자료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지요, 그렇지요? 이런 식의 편향된 북한의 역사책을 그대로 인용해서 북한의 사관을 가지고 연수를 하고 있다, 이걸 지금 문제지요?

그런데 이걸 보면 국내외에서 이렇게 많은 연구성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공동수업안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되려 전교조 집행부나 핵심에 있는 교사들이 교원의 핵심 자질 중의 하나인 전문성 확보를 그만큼 게을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생들한테 균형 잡힌 시각을 심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문제에 관해서 그 교원단체 내부에서도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냥 자꾸 얼버무리시는데요, 이렇게 순진한 국제정치관이나 편향된 역사의식이 그대로 학생들한테 직간접적으로 학습이 된다면 향후 세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 각별히 주의해야 될 일이고요.

아울러서 여타 교육 현안에 대해서 전교조가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 학교나 교원평가제 등…… 이런 점들을 교육을 할 때 전교조가, 지금 현재의 전교조가 우리 공교육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전체적으로 보면 기여한 부분도 있고……

○정문헌 위원 아니, 지금 현재를 말씀을 드리

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글썬요, 그걸 지금 와서 딱 대차대조를 찾아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문헌 위원 초기 전교조의 교육 운동은 그 순수성에서 대국민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동조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교조의 교육이 변질되어서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적이 적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걸로 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역시 또 단체는 단체대로의 자율성을 우리가 보장할 건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좌우간……

○정문헌 위원 전교조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정문헌 위원 전교조에 대해서 부총리후보자께서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인식은 무엇입니까? 전교조가 선생님들의 단체입니까, 아니면 노동자들의 단체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교원단체지요.

○정문헌 위원 교원단체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정문헌 위원 분명합니까?

그런데 이번 전교조가 불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특히 10월 말에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서 입시생과 학부모들한테 심대한 우려를 형성시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고 교육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교육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접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교원단체가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 아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다 무시하고 연가투쟁을 강행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기 어렵고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가에 관해서 함께 확인하고 논의를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정문헌 위원 아무리 법에 규정된 연가라 하지만 당일 수업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 소재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정문헌 위원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과 일본이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골화하고 있는데, 백두산 공정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동북공정에 대한 비판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 중국의 계속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것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제가 그 분야에 전문은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저도 걱정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정문헌 위원 거시적이고 긴 맥락에서의 접근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거시적이고 맥락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동북공정을 중국의 21세기 대중화민족주의, 옛날에는 중화문명 중심인데 이제는 변방의 민족을 끌어안기 시작한 겁니다, 내이션 스테이트(nation state)로. 중국의 대중화민족주의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동북공정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고구려 공정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지금 동북공정은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발해사, 고조선사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정문헌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하면 중국은 지금 동북에서 발원한 모든 민족들이 중국의 신화적인 인물인 황제 헌원의 손자인 고양 씨 전욱과 고신 씨 제곡, 이 두 씨족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주몽의 고 씨도 여기에서부터, 고양 씨 전욱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북공정을 선행하는 역사공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맥락에서 보셔야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상주단 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 그러니까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역사시대대로 끌어올리고, 이들 나라와 동이족과의 관계를 끊는 공정을 이미 마쳤고,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 이것이 동북공정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통일 한국에서 간도 문제 등을 포함한 영토 문제에 썩기를 박음과 동시에 북한에 급변사태가 초래되었을 때 영향력 강화, 아니면 실질적인 지배를 꿈꾸고 가는 분위 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후보자께서는 동북공정 외에 한반도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 아시는 부분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여 하튼 적어도 중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티베트에 관한 정책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한반도의 북쪽에 대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우리가 민족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정문헌 위원 제가 한 부분만 더 지적을 해 드리면요, 92년 한·중수교와 동시에 중국은 허베이성 탁록현에 귀근원(歸根苑), 근원으로 돌아가는 궁전과 중화삼조당, 중국의 세 조상을 모시는 삼조당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것을 2008년 북경올림픽 때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안에서 ‘치우 껴안기’ ‘신녀 껴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치우는 아시다시피 사마천 사기에서도 고구려라는 나라의 동이족 대족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인물인데, 이 세 분을, 치우나 염제 등을 다 중화민족으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신화시대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과서 체제는 어떻습니까? 고조선에 대해서 몇 페이지나 나오니까?

더 나아가서 충격적인 것은 지금 조선족자치주 왕청현 만천성국가삼림공원에다 백의신녀(白衣神女)라는 이름으로 우리 웅녀상을 세웠습니다. 18m 520t의 거대한 모습으로 자리 잡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웅녀상을 통해서 단군신화를 중국 변방신화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과서 체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이 역사 왜곡을 하고 ‘우리가 이것이 틀리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우리 교과서를 들고 나와서 ‘니네 얘기가 이렇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심각한 우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문헌 위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정문헌 위원의 상당히 중요하 지적이 있었습니다.

9월 27일 아침 7시 반에 국회에서 ‘중원대륙의 주인은 고구려였다’ 하는 초청토론회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나오셔서 한번 들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경숙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석 의원과 양형일 의원은 현재 임시이사가 아닙니다. 과거에 교직에 있을 때 임시이사를 했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은희 총장이 마치…… 어디서 낙하산식으로 된 게 아니고 다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된 거고 덕성여대에서 교직을 오래 하신 분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시이사의 문제가 결국은 사학비리나 분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감을 담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그동안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학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또 한나라당의 16대 의원들이 이사장이나 이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문제는 임시이사보다도 정식으로 오래 하면서 분규를 일으킨다든가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습니까? 교수들은 정당에 가입하게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당에 가입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을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
을 해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만약 정치적인 중립성에 심대한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판단해야 되지 않는
가 이 점을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이경숙 위원 다음으로 오전에 중도에 그쳤었
는데요, 내정자께서 인가한 학교 중에 6개 학교
가 문제였다 이렇게 했었고, 그 문제 원인의 근
거를 찾아보면 설립준칙주의에 의해서 문제가 발
생한 게 아니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내정
자께서 동의를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후에도 그러면 과연 학
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보니까 많은 학교들
이 부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사 확보율 법정
기준에 미달한 학교도 있고요, 도서관의 열람석
이 학생 정원의 2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미친 학교가 있었고, 학생등록금 의존율이
80% 이상이어야 되는데 미달한 학교가 5개 대가
있었고,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5%
미만이 5개 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부담금
지출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법정기준 미달이 5개
대가 있고요, 자산 매입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면
서도 자산 전입금이 전혀 없는 경우가 7개 대,
학비 감면 비율 법정기준 미달과 학생 1인당 장
학금 10만 원 미만이 11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1인당 연구비 100만 원 미만이 8
개 대,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3만 원 미만이 7
개 대, 교육비 환원을 100% 미만이 2개 대, 이러
게 보면 인가된 14개 학교 중에서 금강대를 제외
한 13개 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대학설립준칙주의라는 게 대학의 다양
화와 특성화를 위해서 도입했었는데 이게 왜곡되
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까지 예측을 하면서 해야 되
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2003년도
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 정원 수
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

런데 이렇게 막 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을 고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양간을 고치기 위한 대
책이 있어야 될 텐데 특별히 생각하신 게 있습니
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이경숙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제가 참여했던 그
위원회 위원들도 심사기준, 방법, 그다음에 심사
를 해서 설립한 후에 그 학교에 대한 일정기간의
관리, 이런 것들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그래서 그 보고서 뒤에다가 그것을 강화해
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그 뒤에
조금 개선되었다는데 얼마나 되었는지는 저도 알
아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현재까지 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겨우 어떤 것들이 고쳐졌었느냐 하면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몇 가
지의 어떤 정량적인 것은 좀 고쳐졌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량적인 평가뿐만이 아니라 정성
적인 평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 것이 기존의
학교법인이 또 다른 것을 설립할 때 문제가 발생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를 설립할 때는 상당히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사
에 반영되어야 되고 또 사학의 부정이나 비리로
연루되었던 사람이 대학 설립에는 직접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인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는 계
속 정착될 때까지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신설 대학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치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운영자라든가 설립자한테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되
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경숙 위
원님도 같이 걱정하시겠습니까마는 2000년대 들
어와서 우리나라 대학들의 환경이 급속히 나빠진
것이 또 문제입니다. 잘하려고 하던 대학들도 학

령인구가 감소하고 뭐 이러니까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 좌우간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앞으로 설립 문제 또 사립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정책, 감독 문제 이런 것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평준화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특성화라든가 다양하게 시도를 하잖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 특성화하고 다양화가 그 원래의 목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게 진행이 됐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도 외고라든가 또 자사고가 그 목적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사고 문제도…… 지금 자사고가 어떻습니까? 다양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거의 입시명문으로 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장학금의 문제랄지 학생 선발의 문제랄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애초에 그것이 시범학교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계약처럼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것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많이 발견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 가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교육부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내정자께서 올해 2월에 ‘서울대 김신일 교수의 교육생각’에 자사고에 대한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사고의 경우도 여건과 능력이 되는 사립학교들이 전환하고 싶다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반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좀 잘못 판단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반대도 했었지만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자격이 되는 경우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여하튼 그때는 짧은 글을 신문에 쓴 것인데 그 자사고 문제와 몇 가지를 교육부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계속 부딪치고 있어서 다른 정책이 잘 시행이 안 되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교육부와 서로 잘 상의를 해야지 이 피해를 학부모들이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그 글을 썼던 것입니다.

○이경숙 위원 취지는 그러셨을 것 같은데, 실

제 그 당시에 학교별 납입금 대 전입금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에만 자사고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신청한 학교는 많지만……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신청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이경숙 위원 기준에 도달했던 곳은 중등고 하나뿐이었는데 중등고는 자사고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자사고의 기준이 충족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물론입니다.

○이경숙 위원 또 자사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특성화시키고 다양화시켜야 되는데 6개 모든 학교들이 거의 입시위주로 되면서 결국은 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하는 걸로 갔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자사고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정자께서 어떠한 판단을 하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사고 확대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위원회 보고서에서 밝혔는데 그 위원회가 확대를 제안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영어를 써서 최종합시다라는 한 사이클 만에 선택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들은 내용을 다 보고 나서 ‘이건 한 사이클 가지고 결정하기는 어렵다. 한 번 더 돌려서 적어도 3년씩 3년씩 두 번은 한 뒤에 이 제도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연장을 제안한 것이고, 들어온 학교 중에 안 되겠는 곳은 나가게 하고, 또 ‘이래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건 한두 개 학교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결정이었지 무슨 확대니 축소니 이런 것은 그때는 중요한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확대가 아니고 좀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이군현입니다.

오전에도 개정 사학법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7월 1일부터 이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이군현 위원 이후에 최초의 임기 만료가 되는 이사장 이사가, 이사장 즉 설립자라 하더라도 그 후임을 개방형 이사로 선임하도록 경과조치가 규정돼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아주 자세한 조항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개방형 이사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개방형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속칭 말하는 개방형 이사가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친인척이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서 하고 그것을 그 학교의, 학교 같으면 학운위, 무슨 교수협의회 이런 데서 추천해서 그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속칭 개방형 이사라고 하는 것은 초·중·고는 학운위에서, 대학은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반드시 4분의 1 이상을, 전체 이사 중에서 4분의 1 이상을 반드시 채우라고 하는 이사를 우리가 속칭 개방형 이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설립자인 경우라도 이사장도 이사이기 때문에 지금 부칙 규정에 의하면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히 개방형 이사가 교육부의 의지대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 설립자인 이사장은 자신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보다는 도리어,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잘못된 법입니다마는, 잘못된 법 때문에 자신의 학교를 잃고 맙니다. 실제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도 있었지만 광운대학이라든지 경기대학이라든지 경인여대라든지 많은 대학들에서 그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든 이사든 그 누구가 되었건 이사회 구성 멤버 중에서 법적 비리나 또는 회계상의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민사상의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든지 벌금을 내든지 하면 되는데 주인된 권리를 상실하게끔 지금 이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적에는 개정된 사학법 중에서

가장 독소 조항이 개방형이사 제도이고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적합하지 않은 법이라고 저희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재개정안을 다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내정자에게 물겠습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사학법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겠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에서 그렇게 발의들을 하셔서 논의를 하고 있고 여러 의견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 논의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시면 집행부를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존중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제가 내정자의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내정자, 김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83년인지 84년인지 저도 기억이 분명치 않지만 지금부터 이십삼사년 전입니다. 저도 교수를 하고 있을 때 유성의 모 호텔에서 한국의 주요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교육혁신 모임을 만들었던 것도 기억을 하고 그때 우리 내정자님께서 아마 책임을 맡으셨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저희보다 교육계의 많이 선배이시고 또 우리 교육계에서 존경받는 원로이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김 내정자님께서 갖고 계신 교육적 소신에 대해서 저는 참 존경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감사합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나 오늘 답변을 함에 있어서, 장관 자리가 물론 자기 뜻을 마음대로 관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국회라는 곳이 있고 또 이해관계 집단의 뜻을 고려해서, 정책이라는 것이 이해관계 집단의 뜻과 전혀 배치되어서 정책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해서 더 과감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내정자가 오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오전의 말씀이, 제가 좀 혼란스러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군현 위원**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해서 과감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음을 내정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기억을 정확히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열심히 하겠다, 또 사태를 파악해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겠다……

물론 사태를 파악해 보고 적절히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문회의 목적이 잘해보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다짐을 받는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라고 하는 자리는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요한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서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 또 방향 이런 생각을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듣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듣고 국회의원과 여야가,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들어 보고 ‘아, 저분이 교육부의 책임자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주요한 교육정책 현안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육부총리로서 적합하다, 안 하더라는 것을 여기에 있는 교육상임위 위원들이나 국민들이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하겠다. 살펴보고 판단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굉장히 실망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보자에게 주요한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과 의지를 답변해 주셔야 우리가 가·부를, 책임자를 판단할 텐데…… 사실 저희 한나라당이 전부 모여서 의논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교수님께서 내정자 되기 전에, 내정자로 되셨을 때 내심 참 기뻐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교육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피력해 온 것으로 죽 봤을 때 저만한 분이면, 저런 소신을 또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 교육이 저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사실 취임도 되기 전에 본인의 입장을 상당히 바꾸는……

또 내정자께서는 그렇게 내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입장이 바뀌었다

고 판단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보고 듣는 국민과 우리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인식은 입장이 상당히 선회하고 바뀌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한나라당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해 대고 있고, 지금 현재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당에서도 그동안의 교육 생각과 또 내정자 된 이후에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해서 양쪽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쪽에서 사실 방어를 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감사합니다.

○**이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에 대해서 답변이, 그동안 교수로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일관성과 원칙을 가지고 나가시지 않고 자꾸 좌고우면하면서 미리 대통령하고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미리 너무 코드를 읽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질의할 것을 몇 가지 더 가져왔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여 이번에 이 일이 잘 되어서 교육부의 책임을 맡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김 교수님 아십니까? 그 기억하는 김 교수님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생각과 철학들을 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소신 있게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마이크가 꺼져버렸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살고 그것이 생명이고, 학자는 원칙과 소신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다……’

지금 장관을 길게 하면 1년 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관 자리라는 것이 1년 반, 유한한 것이고, 그러나 평생 동안 쌓아왔던 학자적 소신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것이고 또 재임 기간 동안, 만약에 되어서 하시는 모든 생각과 정책의 방향들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가져왔던 기대들 또 일선학교에……

사실은 제가 오늘 내놓지 않았는데, KSOI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선생님들이,

왜 이분이 장관으로서 책임자라고 생각하나 또는 책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나에 대해서, 책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열린우리당 유기홍 위원입니다.

오전 서울대 입시안 관련 질의에서, 우선 학생 생활기록부 반영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여기 후보자께서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유기홍 위원 특히 서울대학교가 반영률이 2.28%에 불과하고요. 그에 반해서 이것이 본고사화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논술의 비중은 10%에서 30%로, 심층면접의 비중도 10%에서 20%로 늘어나고 있고 특목고생들이 유리한 특기자 전형이 2배 이상 점점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저와 마찬가지로 우려의 뜻을 표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반가운 생각을 가지고요. 이것이 다른 학교까지도 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만약에 부총리가 되신다면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요.

2005년 8월 31일날 논술고사가, 혹시 본고사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교육부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실현되도록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만약에 부총리가 되신다면 그 점,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심층구술 면접고사에 대해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너무 하향식의 느낌이라면 심층구술

면접고사도 좀 본고사화해서 사교육의 혜택을 덜 본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권고지침 같은 것들을 좀 새롭게 만드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어쨌든 저는 이것이 평등교육을 오랫동안 지향해 오신 우리 후보자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의 정의의 실현이라는 생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부 간부 중에서 서울사대 출신의 비중이 좀 과다하게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지적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신문에서 한 번 봤습니다.

○유기홍 위원 지금 내정자 자신도 서울사대 출신이시고 또 오랫동안 봉직을 하셨고요.

2000년 이후 임명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열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서울사대 출신이셨고요. 현 교육부 실·국장 15명 중에서 7명이 서울사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5급 이상을 총괄하면 한 16.1% 정도이니까 이 부분은 적당하다고 얘기될 수 있는데,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서울사대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하는……

어떻습니까? 제 통계 숫자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좀 과도하게 많은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좌우간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꼭 나쁘다라고만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다양화라든지 정책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사대 출신 학자·연구자, 이런 분들 중에서 좀 좌장 격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인사문제에 잘못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저도 좀 우려가 돼서, 아까 우리 주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비리 사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임시이사를 파견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 관련자들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 부총리 내정자께서도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사회 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유기홍 위원** 그럴 만한 자격과 전문성이 있는가가 문제이지 시민단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시민단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혹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그 부분은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박찬석 총장님하고 양형일 총장님이 총장 재임 시절에 임시이사를 하셨던 것까지, 그 문제를 열린우리당과 관련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좀 사실 관계가 잘못되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실 때도 일단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중국이 동북공정을 앞세워서 우리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사 왜곡을 이미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요새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드라마 ‘주몽’ 그리고 ‘광개토대왕’까지도 중국 사람이라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걸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발해 역사까지도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발해가 고구려 후예인 대조영이 세운 나라라는 것은 그리고 초기의 명칭이 진국이었다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사서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말갈족들이 세운 나라이고 국호도 말갈이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한

민족과의 연결성을 차단하고 변방의 소수민족 정권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역사왜곡이고요.

최근에는 ‘백두산공정’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백두산 문화를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연나라 문화에 연결시키는 어찌 보면 얼토당토않은 이런 시도까지도 있고, 이것이 그냥 학술사적으로만이 아니라 백두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단독 등재를 지금 중국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두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단독 등재할 경우에 그러면 국제표기명이 ‘백두산’이 아니라 ‘장백산(창바이산)’으로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어찌 보면 동해를 ‘이스트 씨(East Sea)’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씨 오브 저팬(Sea Of Japan)’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민족의 출발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백두산의 국제표기명이 장백산으로 되어 버린다면 이제 우리 애국가마저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라 ‘동해물과 장백산’으로 불러야 하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올지 모른다 하는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스럽게 동북아역사재단법이 지난 5월에 통과해서 이제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부총리로 취임하시게 되면 동북아역사재단을 우리 교육인적자원부가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할하는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만전을 기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사도 그렇고 근·현대사도 그렇고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고 역사과목이 사회교과에 통합되어 있어서 독립 교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역사교과를 독립 교과목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동북아 문제하고 또 대일 문제하고 해서 특히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유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교육과정 문제는 이것이 한정된 시수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의 시간 수를 늘리면 다른 것의 시간 수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화해야 된다는 원칙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

리지만 시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역시 거기에 관계된 여러 관계자 또 단체들과 좀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흥 위원** 시수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더 논의하되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러면요. 역사 교육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유기흥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위원** 올 초에 교육부가 사립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아시아대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대학 비리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설립심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데 있습니다. 설립심사 과정에서 대학이 건축비를 출연금에서 빼내 가지고 완불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가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리가 이어진 것인데요. 이 설립심사를 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래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열심히 하느라고 했고 회계사 분도 거기 위원이었는데 그분이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실수가 있었다면 아무래도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주호 위원** 앞에서 준칙 얘기도 하셨지만 이것은 준칙의 문제가 아니고 준칙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문제였던 게 맞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좌우간 일반적인 심사 기준·절차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고, 물론 그 속에서 심사위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요.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실수가 있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것을 시인하시는 거고 그거는 사과를 하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문

제가 있었다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주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준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두발언에서 평준화를 댐으로 비유를 하시고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같은 경우는 보조수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참 안이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평준화가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의 교육의 열망을 잘 담을 수 있는 댐의 역할을…… 글썄요, 한 6, 70년대에는 했을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학부모 학생들의 열망을 가로막는 못 쓰는 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댐이 마치 잘 기능하고 있고 그래서 보조수로만 잘 트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안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준화 문제가 결국은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참 실망스럽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평준화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불필요하게 이념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조건 평준화는 나쁘다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을 한번 만나서 죽 깊은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분 말씀이 '전교조 교사든 교총 교사든 학생만 잘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평준화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걸림돌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평준화가 사실은 지금 모든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정부나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무조건 평준화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겁니다. 평준화라는 그런 두껍게 낀 이념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면서도 평준화를 마치 잘 기능하는 댐으로 비유를 하신다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교육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평소 부총리 내정자의 지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유는, 무책임한 비유는 좀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구체적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보공개 문제인데요, 평준화가 가로막고 있는 몇 가지 또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평준화라는 것이 모든 학교가 획일적으로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의 차이나 학교의 우열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정보도 공개를 못 한다는 것이 이념적인 논리인데요. 이것은 사실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평준화가 제대로 기능하는 댐인지 아니면 못 쓰는 댐인지를 알려면 정보가 공개되어 가지고 연구도 하고 학부모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부터 다 막고 있으니까 지금 한치 앞도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오늘 제가 아침에 제기했던 평준화고교 내 선 지원 현황 말이지요, 저희가 학교 이름을 다 공개 못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제공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이가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이백몇 명의 학교 인원에 6명만 지원한 학교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학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학교를 공개해서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지 교육부도 거기에 대응을 할 거고 학부모들도 대응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학교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공개를 안 하고 덮어두기만 하면 그 문제가 그냥 계속 은폐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결국 이주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에 저도 동감입니다. 말하자면 공개하자고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활용하자는 말씀으로 들겠습니다마는, 활용에 있어서 그동안에 제가 생각해도 그런 자료들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주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연구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주호 위원 관련해서, 최근 법원에서 수능시험 원자료를 연구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시겠네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러니까 공개를 어느 만치 하느냐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호 위원 연구 목적을 위한 거라고 지금……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공개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보완장치가 없으면 그것이 또 다른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물론 보완장치를 하고 연구자들한테 주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주호 위원 그럴 경우에 찬성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러니까 역시 제한적인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그런 점에서……

○이주호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해 볼게요.

그러면 그 판결에 불만이 없으시면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이제 장관이 되시면 결국 소송 당사자가 되는데 항소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지금 항소하겠다고……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공개가 어느 범위까지 공개인지……

○이주호 위원 지금 답변을 계속 회피하시는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점을 우리가 봐서 그것이 말하자면 연구용으로 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이 다른 폐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주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원의 판결 취지가 연구 목적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해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에서 내린 판결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법에 보면 국감이나 이런 경우에 정보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교육부에다 저희가, 지금 제가 국회의원에 취임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학업

성취도 자료라든지 수능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거든요. 거부하는 것은 사실 국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위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이런 학업성취도 자료를 요구하는데 만약에 김신일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계속 거부하시겠습니까? 계속 위법행위를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제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호 위원** 관련돼서 다시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포함된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2005년 5월에 있었는데 총리 주관 회의였지요. 이 회의에서 입학생들의 선지원 비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학업성취도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또 학업성취도 평가를 확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5월 9일인데 이것을 발표하고는 바로 또 교육부가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6월 26일에 입법예고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보면 ‘특정 지역 학교에 대한 정보는 관리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 개정안을 내면서 정보 공개를 오히려 하지 않겠다고 거꾸로 더 돌리는 법안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오히려 공개를 조금씩 더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추세를 거꾸로 돌리는 처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정말로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검토하고 제 생각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제가 정보 공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죽 드렸는데요, 이런 질의들이 사실은 평준화라는 이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교육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할 때 항상 평준화를 들고 나옵니다. 평준화의 틀을 유지해야 되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발짝 못 나가는 것이거

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후보자께서 교육부총리가 되시면 이런 문제 해결을 위주로 역할을 하셔서 교육에 이렇게 두껍게 낀 이념의 거품을 과감하게 걷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괜찮습니다.

○**안민석 위원** 평소에 체력이 좋으신 편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석 위원** 저는 오전부터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몇 가지 소회가 있는데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만약에 후보자께서 부총리로 임명되시면 부디 아이들을 입시에서 살려낸 교육부총리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명되신 이후에 일각에서는 후보자의 소신에 대해 아전인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에 의하면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고 평준화를 반대하는 평소의 소신을 가진 내정자로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을 파악해 본 결과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에 참석하셨을 때 그 당시 함께 참석했던 한 분에게 당시의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어떠셨느냐 하고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로 자립형 사립고의 실태를 평가해 볼 때 확대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신 것으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씀이 틀린지, 맞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나, 축소나 하는 것은 제대로 시범사업을 한 뒤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위원회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내정자께서 쓰신 ‘교육생각’이라는 이 책 속에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학교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다’, 학부모들의 학

교 참여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신 챗터였습니다. 이 책을 쓰신 것이 1996년이었는데 그 당시가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초창기였습니다. 아마 학교운영위원회를 상당히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정자께서 보시기에 지난 10년 동안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제가 그것을 주장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동안에 보면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발전이 부족하다고 보고 더 잘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후에 교육자치 포함해서 학교 내부에 역동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소의 대안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학운위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요. 그것은 제가 일을 시작하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역시 ‘교육생각’이라는 이 책 속에 후보자의 교육에 관련된 소신과 철학과 의견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책 속에 아이들의 신체활동, 체육에 관련된 언급이, 그런 가치가 단 한 부분도 표현되고 있지 않은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아이들의 교육은 주지교육밖에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거야 물론 아니지요. 체육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안민석 위원 그럼에도 이 책 속에 후보자의 평소 교육에 대한 철학과 가치가 담겨 있는데 신체활동의 가치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때그때 짧게 쓴 글들을 모으다 보니까, 사실 출판사에서 그 중에서 추려 뽑았는데 체육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여기저기 쓰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민석 위원 성적 중심의 획일적 입시위주 교

육풍토가 바뀌어야 된다는 소신은 분명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안민석 위원 10대 청소년들의 체력이 40대 어저씨들보다 떨어지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한·중·일 청소년 체력 비교에서도 한국이 가장 낮은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안민석 위원 그 주된 원인이 입시위주 교육풍토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여러 가지 가정생활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학생들의 체육활동, 건강활동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안민석 위원 이후에 청소년들의 체력 저하 그리고 아이들의 비만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사실은 제가 한국교육학회 회장입니다마는 체육교육학회 회장님께서 저와 만나서 두 학회가 좋은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요 며칠 사이에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교육학회와 체육교육학회가 몸과 마음의 조화교육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 제가 그것을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이들의 체육활동이, 신체활동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지금처럼 학교에서 맨땅 운동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려고 하면 학교에 수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 수영장이 없을지라도 학교 가까운 지역에 수영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와 예산 여건으로서는 이러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지난해부터 학교 BTL사업을 할 때 복합시설을 지어야 한다, 학교 안에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유아보육시설, 노인시설, 심지어 주차장까지 포함된 복합시설을 지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해서 다행히 올해 교육부에서 전국에 여덟 학교에 시범사업을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주 유감스럽게도 그 여덟 개 시범사

업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BTL 복합사업이 단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권철현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지금 위원님한테서 처음 듣습니다.

○안민석 위원 저는 우리 예산구조의 한계 그리고 국민생활체육이라든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복지시설 확충을 부지가 있는 학교 안에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지역과 학생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 개념이 한국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합 개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부총리가 되시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고 저희들이 다음주에, 다음주가 아닙니다. 조만간, 며칠 후에 국회와 정부 각 부처, 6개 부처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육부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감사합니다.

○안민석 위원 나머지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선에서 그리고 일각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논의의 시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민석 위원 한다면 언제쯤 학제 개편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학제는 단순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문제가 아니고 평생교육 체계 속에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안민석 위원 9월학기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것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좌우간 그것도 함께 포함시켜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총리에 임명 되시면 아이들을 입시 지옥으로부터 구해 내는 부총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와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기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오전에 제가 후보자님의 ‘교육생각’ 여기에서 많은 교육철학, 정말 존경할 만큼 그러한 것을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인사청문회 진행과정을 보면서 또 오후의 것을 보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와 같은—산 너머 걸려 있는—그것을 쫓고 싶은 그런 것까지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용기라 그럴까 의지를 접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실망스럽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정자께서는 그야말로 학자로서의 소신과 철학을 지키면서 그래도 실현하실 분이다, 일단 하여튼 장관만 되시면 그다음에 이 많은 철학, 소신, 이것을 저버릴 수가 있겠는가…… 그래도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지금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보면 자꾸 그것이 수정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권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정책을 선택하면 교육정책이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 하셨지요? 이겁니다. 춤을 추게 되면 교육정책을 여러 가지 혼란에 빠뜨려서 거기의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되는 거지요. 따라서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교원 가족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제가 두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또 종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이것도 말씀하셨

지요? 제가 여기서 아까 오전에 “살아가는 방법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만 해도 그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도 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나라의 교육에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장관을 바라보지요. 교육부를, 정부를 바라보지요. 그러면 연연하지 않고 깨끗하게 설득도 시키면서 자기의 좋은 철학은 성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실망스럽다고 한 것에…… 그야말로 진정성과 정직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육자라든가 교육 수장,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정책, 교육 과정 이것이 모두 진정성이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누구든지 신뢰를 하면서 따르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정권의 정책 방향, 이것에 따라서 자꾸 바뀐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실망을 많이 부추기는데요.

오늘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학법 관계도 제가 ‘아, 정말 제대로 짚어지겠구나!’ 했습니다. 사학법에서도 처음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물어봤어요, 이군현 위원께서. 그러니까 “개정 필요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학법 관계, 절차, 그동안에 알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학법이 어떤 절차로 개정됐는가를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대체적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처음에는 사학법 개정이 필요 있다, 그다음에 여당 위원들께서 “사학법 개정이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부터 그만 이게 변심이 되는 거예요. 개정도 아니고 또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저도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물었지요. 그때마다 무슨 말인지 그 소신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후에 드디어 확실히 달라진 것은, 국회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장관으로서, 정부로서 개정 필요의 의지를 높이지를 않고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국회에서 논의하면 존중하겠다.” 그러면 정부의 수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책임을 지는 정부의 소신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댐에 비교를 했습니다. 댐에 비교를 했는데 이 댐도 그렇습니다. 평준화를 댐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댐을 건설할 때는 환경·자연보호주의자들이 또 반대하겠지요?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지요.

○김영숙 위원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무분별한 그 댐 공사 때문에 보호해야 할, 또 거기 피해받는 게 뭡니까, 희귀 동물이라든가 좋은 동물, 우리 생태계, 이게 또 망가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생태계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평준화 댐이 또 강화된다고 그래 보세요. 강화되면 우리가 육성해야 할 경쟁력 있는 인재가 육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책은……

아까 오전에 평준화정책에 대해서 잘하셨지 않습니까, 이 소신을?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깨끗이 나가셔야지요. 대다수의 여론을 들어 보십시오. 보면 후보자님의 평준화 철학·소신에 전부 다 박수를 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고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학법 관계도…… 이것 전직 장관들까지 전부 다 나섰습니다. 자율성을 주어야 된다고 그리고, 절차가 여야 간에 합의된 법이 아닙니다.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날치기로 통과된 법이에요. 우리 한나라당 못 들어가게 저지했었습니다. 겨우 뚫고 들어갔을 때 벌써 의장석 다 점거를 했지요. 그렇게 날치기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거리에 나가고 전국을 다니면서 호소를 한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위헌소송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위헌의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또 잘못되어 있는, 교육의 저해요소가 있습니다. 열두 가지의 독소조항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천주교 종교단체, 사학단체, 여러 단체에서 ‘이것 재개정을 해야 된다’, 개정을 촉구하고, 그다음에 법률 불복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만 매달려서 ‘그대로만 하겠다, 이것은 모르겠다’, 이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이것 법률안 잘 보시고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아주 진지하게 좋은 법을 만들

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 주시면 저는 그것을 열심히 집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정부의 안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 법을 훑어 보십시오. ‘아, 이것은 독소조항이구나’, 그러면 교육을 위해서…… 사학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정부는 기다립니까, 여야의 의견이 첨예해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왜 있습니까, 교육의 수장이?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다음에 입시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2008학년도 입시요강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이에요.

그다음에 “학생부 50%, 논술 30% 반영하는 것은 정시 일반전형으로 학생부의 반영비율을 확대해서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답변에서는 또 달라지셨어요. 오전에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입시요강과 관련해서 서울대학교와 협의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대 쪽에다 또 어떤 요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여하튼 서울 대학의 자율성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자율성은 고등학교 교육을 해쳐서는 안 되는 범위 내에서의 자율성입니다. 그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김영숙 위원** 고등학교의 무얼 해친다는 겁니까? 지금 학생 내신율을 낮게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기 때문에 그것 실질반영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신뢰도가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 서울대학에서 반영률, 30%의 논술을 얘기해서 다른 대학도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왜 그러겠습니까? 학교 간의 학력차가 있다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학교의 신뢰도에 대해서…… 제대로 학교에서 원하는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겁니다. 무작정 “서울대학하고 이것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아닌 것으로 봅니다. 소신은 소신대로, 아침에 오전…… 묻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구미에 맞는 답변을 하시면 그것 곤란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볼 때 실망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정책, 이 책자에 있는…… 이 ‘교육생각’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국제중학교도 그렇습니다. 아까 유출 장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못자리 이야기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좋은 글이 있었는데 “1등 농사꾼은 못자리를 남의 논에다 안 만든다”고 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고서…… 저도 묘판—못자리—지론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 비슷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유학생 수가 상당히 늘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김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재를 외국 대학에 유학시키는 유출 장학을 막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지원하면서 유치 장학으로 전환해야 된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정리해 주시지요.

○**김영숙 위원** 그러려면 인재 못자리를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는 앞선 나라가 안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다면 국제중학교를 설립하면 교육부가……

중·고등학교가 시·도 교육청의 권한이지요, 교육감의?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김영숙 위원** 그렇다면 국제중학교를 이렇게 막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설립을 승인한다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해서라도 이것을 막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국
제중학교 문제와 인재 못자리 제 주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두 가지를 따로 한 겁니다.
못자리 이야기가 딱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국제
중학교 또 딱 문제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감
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
오.

○민병두 위원 오늘 하루종일 고생이 많습니
다.

기본적으로 철학적으로 일관성을 저는 갖고 있
다고 보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정책집행자의 위치
에 있다 보면 현실 적합성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큰 철학적 골격만
유지하면 된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생각 중에 변함이 없으신 것이 있으면 계
속 유지하셔도 되고, 저는 그래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또 학자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부
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답변의 어
떤 정교함,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
으셔도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민병두 위원 다만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
시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두세 차례에 걸쳐서 규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
해서는 좀 유감이라는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 당시에 다른 야당들도 함께,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생
각합니다. 속기록 삭제까지 요구하고 싶지만 그
렇게 하면 간사들께서 너무 번거로우실 것 같아
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로 제가 평생교육의 중요성, 이 문제
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보면 대개 한 인간이 한
토막의 인생을 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
슨 말씀이나 하면 5살, 6살 때부터 부모를 떠나
서 농사일을 배우고 농사를 짓다가 정년퇴직하지
않고 일생을 대개 마감하지요, 학교를 다니지 않

고.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대개 세 토막의
인생을 살게 되지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부모
의 품에서 벗어나서 직장에 가고 대개 정년퇴직
을 하지요. 정년퇴직이 대개 보장이 되지요. 그리
고 짧은 노후를 보내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지식정보화사회, 21세기 사회가 되면서
는 하나의 인간이 세 토막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네 토막, 다섯 토막의 인생을 살게 된다
고 봐요.

부모의 품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요즘에 와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
만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
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과거에는 정년이 보장됐지
만 대개 40대 중반이면 구조조정의 틈에 밀려 가
지고 결국은 다시 또 낙오자가 되거나 재출발을
해야 됩니다. 정년은 빨라지고 반면에 노후는 길
어지고, 그래서 인생을 네 토막, 다섯 토막으로
살아야 되는, 또 각각의 짐이 굉장히 무거운 그
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연락처라고 할까요, 사회에
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에는 40대 초·중반부터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다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시키고 평생교육시키는 것이 굉장
히 중요하고, 고령화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평
생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독일이 20세기 초반에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
은 그 당시에 필요한 인력,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력을 가장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지요.
영국은 여전히 귀족교육, 엘리트교육에만 집중했
는데 독일은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대거 육성하
고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화사회
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대대적으로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20세기 중반에 필요한 것은 창의력과
상상력이고 그런 면에서 대학을 집중적으로 키워
가지고 결국은 20세기 초반에는 독일이 강국이었
지만 그 후반에는 미국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실
업이라는 장애를 뛰어넘어서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이 제대로 정
비되고 개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니다.

대한상의인가요? 거기에서 계산했을 때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을 그 사회에서 썩먹기 위해서 재교육비가 66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면 1년 이상의 인건비가 든다는 것이지요. 1년~2년을 그 회사에서 다시 재교육시켜야지만 제대로 된 인력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을 졸업한 인력이 정말 사회에 제대로 진입하고 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의 교육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40대 초·중반, 그리고 정년퇴직 이후의 고령세대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육체제를 인적자원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양성 문제, 학교와 대학 문제는 열심히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배치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적고, 특히 재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재교육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그런데 부총리님 임기가 1년 6개월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대학과 기업 간의 어떤 연계, 그다음에 재취업하고 이럴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상이라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뭔가 어떤 파일럿 프로젝트든 하여간 이런 몇 가지, 일점 돌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쪽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런 산학연계랄지 기술인력으로서의 활용 이런 문제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

오늘 고대 문과대 교수 121명이 첫 ‘인문학 선언’을 한 것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 됐습니까?

○민병두 위원 ‘인문학이 존립 기로에 섰다. 그래서 대학이 상업화되면서 인문학이 지금 설 땅

을 잃고 있다. 인문학은 시대를 초월해 가꿔야 할 문화자산이지만 무차별적 시장논리와 효율성에 대한 맹신이 팽배해지면서 존립 근거와 토대마저 위협받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면서 121명이 이 선언에 동참했는데 내달 초에 주요 사립대학도 공동선언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쪽 측면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인문학이 없으면 철학적 기반이 약해지고 역사인식이 약해지고 국가의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고민하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평소 제가 MIT나 그밖에 공과대학으로 시작한 대학들이 체계화하면서 인문·사회과학을 함께 하면서 공과교육까지 강화된 것으로 알고 늘 그렇게 주장을 해 왔고 이런 것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요새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예산……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투입했을 때 무엇이 성과이고 무엇을 성공으로 규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만큼 진척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예산은 교실을 개선하는 데 몇 억을 투입했다 하는 것만 나와 있지 그 개선효과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가령 인문학에 대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투입하면 인문학에 대한 논문이 몇 편 늘 수 있다든지…… 혹은 앤서니 기든스가 쓴 책을 보니까 영국의 핵심적인 교육정책으로 문자 해독능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모든 학교에 인터넷을 연결할 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떻게 늘려 갈 것인가, 이런 개선목표 같은 것을 분명히 하고, 폐교해야 할 학교의 대상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폐교하겠다는, 이런 것이 분명하단 말이지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스페니쉬들이 다니는 학교나 흑인들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중도포기율을 몇 년도까지 어떻게 줄여 나가겠다 이런 것이 분명한데,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민병두 위원** 그리고 사립대학교 재정 건전화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보면.

지금 대개 학습자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민병두 위원** 그런데 수익용 재산 운영수익을 교육비로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 법인이 56개가 되고 건강보험료, 연금부담금조차 전혀 부담하지 않는 법인이 96개가 되고, 이것은 선생님이 13년 전에 한번 지적하신 바가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민병두 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인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민병두 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제대로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기부금입학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일각에서는 당대 혹은 다음 대 말고 가령 할아버지가 기부금을 냈을 때 정원 외로 해 가지고 손자대에서는 그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지금 정원제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또 보통 하는 말로 입학은 어렵지만 졸업이 쉽다 그러는데 우리 대학의 학사 관리에 있어서의 체계화가 제대로 되기 전에는 기여입학제는 수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민병두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민병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오랫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신일 내정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 그리고 여야 위원 모두 가지고 있는 일정한 기대는 교육의 전문성이 높으시고 또 경험과 경륜이 높다고 하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간에 연구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을 수립하는 데도 깊이 개입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교육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좋은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견이 없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현재 학교라고 하는 데는 무릇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장소이고, 따라서 그것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곳, 그러니까 교실과 체육교육을 하는 운동장 이런 곳이 그 현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점이 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임해규 위원**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것이 학생 중심 교육과정인데 우선 수준별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애초에 목표했던 대로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내정자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수준별 교육과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물론 시설의 문제가 있고, 특히 교사들의 부담이 아무래도 늘어나기 때문에, 또 교육자료들이 차등화되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와 함께 교사들의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준비와 재정 투자, 이런 것들이 그동안 부실해서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점수를 주자면 한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클쎬요, 그것을 몇 점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임해규 위원** 교육 현장에서 그간의 학교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매우 이상적이고 좋은 교육과정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것이 현재 우리의 교육실정으로 보아 현장에서 실현하기에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하는 견해가 일선 교사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 3학년 과정, 즉 12학년 과정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러하다고들 평가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 목표와 학교의 현실적인 여러 시설, 또 교사 문제, 이런 것들 간의 괴리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 괴리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정책과제라고 봅니다.

○임해규 위원 선택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7차 교육과정의 이름이 학생 중심 교육과정입니다마는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지 못하고, 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이나 교사의 수급 같은 것이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것이 그냥 일부 보완해야 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목적하는 바의 교육과정을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그것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현재 아시다시피 8차 교육과정에 관한 논의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다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만약에 일을 맡으면 그 문제를 더 자세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점을 자꾸 질의하는 것은, 8차 교육과정이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7차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도 현장에 가서 연구하고 실사하고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 과정에 부족한 교사, 부족한 교실, 이런 점들을 따져서 순회교사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잘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차 교육과정은 그냥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이제 교육부장관이 되시기에 즈음해서, 더군다나 교육 전문가이고 이 분야를 연구해 온 분이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8차 교육과정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되시면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바로 이런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역시 7차 교육과정에서 경험을 했듯이 아무리 문서상의 계획이 좋아도 현실성이 없으면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교육과정은 조금 더 이상을 추구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을 확보하는 데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내정자께서 답변하실 때 “학교 내에서 재능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수준별로 교육이 이루어져서 특수한 형태의 학교가 자꾸 많이 생기는 것보다는 학교 안에서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다면 평등성과 수월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매우 이상적이고 또 지향해야 될 바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들을 이번 8차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내정자께서 가지고 계신 그러한 교육철학과 정책방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탁상의, 또 이상적이기만 한 교육정책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음으로는 실업고와 전문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업계 고등학교가 학교의 숫자로는 전체 고등학교의 3분의 1, 그리고 학생 수로는 4분의 1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실업고등학교의 수업이 교실 붐비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임해규 위원 또한 실업고를 나온다고 해서 취업이 상당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실업고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정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저도 아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 자체의 교육과정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쪽에 정책들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한 20년 동안 계속 이 문제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학교 내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도 중요하지만 졸업한 학생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입직,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계속교육, 이것을 해야 제대로 될 텐데 그 부분이 제대로 못 된 것에 실업학교 실패의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부분을 좀더 챙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 우리 인적자원 관리의 차원에서 그것도 함께 다루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단순하지는 않지만 실업고는 또 전문대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대학교도 상당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통폐합하는 과정에 있고 학생 모집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일반 대학교에서 전문대의 고유한 과를 가져감으로 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전문대에서 학년을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임해규 위원** 전문대학의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계 고등학교보다는 전문대학은 조금 형편이 낫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역시 거기도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입직이나 계속교육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기능상의 구분이 있는데 그것

이 지금 흐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더 4년제와 전문대학의 기능을 차별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마 오늘 말씀하시는 방향이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또 여러 경로와 절차, 토의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지만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참예하고 또 나름대로 좋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교육부장관을 맡게 되면, 사실 가장 뒷받침을 하고 항상 가까이 있는 분들이 바로 교육부의 관료들입니다. 그런데 내정자께서는 그간의 교육이 국가주의와 또 관료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희생되었음을 누차 강조해 오셨고, 이제 장관이 되셨으니 또 거기에 휩싸이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의 소신이, 오히려 많은 그 교육 관료들과 함께 그 소신을 잘 이루어 나가는 데에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국민의 그런 뜻이 있음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이제 국회방송을 제외하고는 다른 카메라들은 다 철수를 했고, 좀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김영춘 위원** 제 기억에는 지난 2, 30년 동안 내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절망적인 목소리들을 항상 듣고 지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발전해 온 것은 참으로 경이롭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그런 성과를 보여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과거식의 교육체계와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가일층 발전을, 특히 세계의 우수 국가들과 경쟁하면서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내기는 힘든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지난 10여 년 전부터도 계속 교육개혁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되어 왔고 모든 교육 당사자들이 한목소리로 교육이 바뀌어야 된

다,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해 왔습니다마는 후보자님 스스로가 진단하시다시피 10여 년 동안의 그 교육개혁의 노력들이 큰 성과 없이 오히려 교육 수요자들의 불만만 더 가중시켜 온 결과를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김영춘 위원 이렇게 된 마당에는 혹시 교육부의 책임은 없는가, 교육수장을 맡으셔야 될 입장에서 말씀하시기 거북한 면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교육부가 해 온 일이 뭔가 잘못된 게 있었다고 그러면 큰 방향성만이라도 한번 좀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럴 만한 게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여 하든 우리 교육이 이렇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첫째는 국정 우선순위에서 누구든지 교육이 중요하다 하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국정 전체 우선순위에서 교육이 늘 좀 낮아 온 것이 문제입니다. 각 가정의 우선순위는 교육이 최고로 높습니다. 그래도 가정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의 공헌을 늘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물론 교육부라고 책임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말하자면 좀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좀더 현장에 일치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점에 한계가 있었다고 저는 그동안에 밖에서 보아 왔고, 앞으로 교육부의 직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대학입시만 하더라도 그동안 많은 제도 변경이 있어 왔습니다. 아까 오진 질의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서울대의 책임을 많이 지적하고 그 수정을 위한 교육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서울대에만 책임을 몰릴 문제인가? 지금 서울대 2008년도 입시 전형안을 보면 수능시험은 그야말로 자격고사밖에는 안 됩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서울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1등급을 받을테니까 3배수의 학생들은 그 해당 등급을 받고 들어온 학생들이니 수능이 등급제로 이미 결정된 마당에는 그 수능점수를 가지고 변별력의…… 학생을 선발할 수가 없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남은 해답은, 교육부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해답은 학생부의 실질 반영을 높이자는 건데 그 학생부를 대학에서는 어떻게 변별력 있게 구분해 가지고 더 좋은 학생을 선발해 낼 방법이 별로 없더라는 데 학교의 어려움이 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그 대학으로 하여금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고 혹은 학생부의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 혹은 잠재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 성적 평가나 학생활동 기록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만들어 주고서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부의 실질 반영을 높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면접 점수, 논술점수로 변별하겠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 문제만 당장 놓고 보면 교육부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김영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들로 하여금 뭐든지 필요한 자료를 활용해서 하라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 드린 대로 우리 교육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적 제약입니다.

그 대신에 역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면 빨리, 빠른 속도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한 4, 50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제대로 못 해 온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제대로 평가하는 어떤 틀의 마련, 그런 장치의 마련,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교육부가 그런 면에서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혹은 비난이 두려워서 책임을 회피해 온 그런 측면도 없을까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것은 교육부가 그랬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각 곳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

리기는 그렇지만 교육 관련된 여러 단체·기관들에 책임이 함께 나누어져 있다고 봅니다.

○**김영춘 위원** 참 어려운 문제라서 이제 교육부 총리를 맡게 되시면 정말 지혜를 짜고 모든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좀 집약해서 제대로 된 대학입시안, 대학은 고등학교에 책임을 미루고 고등학교는 또 다른 데 책임을 미루고 하는 그런 식의 평풍게임이 안 되도록 좀 집약적인 작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아까 제가 교원성과급여 문제 얘기하다가 중단이 되었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교원성과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산 낭비보다는 우선 성과급의 대상인 교원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당장 교육부가 성과급여 예산을 책정하면서 작년까지는 90%를 균등 분할했다는 말이지요, 올해는 80%를 균등 분할합니다. 그것은 이미 성과급여가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교사들의 급여를 보전해 주는 그런 장치인 것인지,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짐작컨대는 참여정부가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국정 전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한 반영이 아닌가, 편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성과급여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성과관리가 아니라 전시적 성과주의—부정적인 의미에서—그렇게밖에, 낙인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취임하시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다음 질의는 아까 이주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대부분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지원·후추첨 방식에 의해서 이미 평준화의 기본골조는 많은 도시에서 무너져 있습니다. 과거의 명문 고등학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교육여건이 우수한 지역이나 그 학교에 선지원이 몰리지요. 이미 이것은 평준화가 아닙니다. 또 다

른 차원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의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의 실질적인 비평준화가 이루어져 있는 셈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성과급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본질을 짚어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그 학교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열심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들이 지금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강북에 있는 고등학교들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고는 진학을 권하는 그런 교사들도 계십니다. 이 학교에 있으면 서울대에 못 가니까 강남으로 진학 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현실을 두고서 계속 평준화라는 구두선만 외치고 있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학교들은 도와주고 그렇지 않고 무기력하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은 학교평가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교원평가 중심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학교평가도 매우 중요하고 또 교육청 평가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평가는 교육에 관한 각급 단위의 행위주체에 대한 개인, 그다음에 단체 등에 대한 평가를 끌고루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평가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것은 어떻게든지 현장에 맞게 그러나 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사실은 교육 분야하고 다른 분야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과급도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교육사회의 특성을 살려 가면서, 그러나 원칙적으로 평가는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춘 위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에 따라서는 학교평가를 해서 서울대에 많이 보내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라 평균 학력 수준, 혹은 학

습 지진아들이 너무 많은 학교 이런 경우에는 페널티를 준다 말이지요.

심지어는 몇 년도까지 개선을 못 하면 학교를 폐교시키는 그런 조치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격하게는 못하더라도 교육부가 나서서 좀 적극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로부터 개선책을 찾는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김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영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고교 평준화는 적극적 평등정책은 되지 못하고 고등학교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면이 강하다라고 지적하셨는데,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의 획일화는 평준화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학력·학벌주의와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비롯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고교평준화가 해체된다면 오히려 중학교 교육은 현재보다 고교입시 준비를 위해서 더욱더 획일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평준화를 완전히 해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영 위원 현재 평준화에 대해서 입장은 평준화 강화론, 평준화 보완론 그다음에 평준화 해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평준화 보완론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평준화 보완론은 결국 평준화 해체론에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사실 나타납니다. 왜 그러나 하면 후보자께서는 대안으로 학교 다양화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화를 주장하십니까?

그러나 교육의 다양화, 즉 특목고 확대, 자사고 확대, 개방형 자율학교 도입도 현재의 구조에서는 평준화 해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양극화 심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교 유형의 다양화는 학교 형태의 수

평적 다양화가 아닌 수직적 위계로 귀결되어서 결국은 평준화 해체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는 실업계고, 그다음에 평준화된 인문계고, 그다음에 비평준화된 인문계고, 특목고, 자사고 방식으로 사실 수직적 위계의 서열화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학교 유형의 다양화가 아닌 대학 서열구조의 해체, 그다음에 학력주의 해체가 오히려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실 보여집니다. 또한 최소한 평준화 보완론을 말하기 위해서는 평준화의 제대로 된 시행을 먼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러한 조건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자율성을 사실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획일화를 깨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물론 교육주체로서의 교사의 중요성, 교사들의 어떤 전문적 자율성 이것은 보장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교사이외에 학교가 있고 그 이외에 다른 행정체계가 있고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사가 전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최순영 위원 혹시나 아까도 후보자께서는…… 입학은 어렵고 졸업은 쉬워서 사실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거꾸로 초·중·고의 교육이 정상화 되려면 오히려 후보자께서도 계속 다양화, 획일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 이 획일성을 오히려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양화되려면 거꾸로 대학입학을 쉽게 하고 졸업을 좀 어렵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제 이론이 어느 급의 학교에서나 입학보다는 졸업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반복해서 이제 입학 정원관리로부터 졸업관리로 가자 이제 제 의견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서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을 자격시험으로 해서 다 그냥 입학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글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기는 좀 급격한 것이고, 유럽의 나라들은 대체로 그런 제도를 채택하

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마 후보자께서 주장하는 다양화, 그리고 그야말로 오히려 초·중·고의 평준화에 대해서 보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평준화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오히려 더 공교육을 내실 있게 할 수 있고요.

장애인교육권 보장에 대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교육이 매년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직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각종 특수교육 실태조사, 각종 통계의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학부모들과 당사자들이 느끼는 열악함은 그 정도가 더욱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일반학급에서 배치된 특수교육 지원대상인 6700여 명의 학생들이 제대로 된 특수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장애인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가서 농성을 하고 삭발을 하고 소복을 입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교육지원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헌정사상 제일 많은 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228명이 그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을 공청회를 거쳐서 곧 발의할 예정이지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저는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내용이 의무교육 확대 등 매우 진일보한 내용이어서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법이 제대로 제정이 되었고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현재의 법이 아무리 제·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정의 문제입니다. 재정지원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여성부, 복지부 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 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 혹은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국회

에서 통과해서 제대로 시행된다면 교육부와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산이야 물론 항상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장애인교육의 중요성만은 저도 항상 신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는 평생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해교육 야학 지원에 관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얼마 전 청소년위원회에서 2006년 비정규학교 운영지침에 있어서 2007년부터는 비정규학교 운영지원과 비정규학교 문해행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이유는 실태조사 결과가 대부분 비정규학교의 청소년 등록인원이 매우 적고 일반 시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비정규학교는 학교교육에서 소외 받은 저소득층 주부, 노인, 그다음에 중도탈락한 사람, 그다음에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자생적인 교육기관으로서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시민교육인 문해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의 교육정책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또 특히 학교교육의 소외계층의 교육까지도 포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평생교육, 성인 문해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야학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교육복지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해야 될 분야라고 봅니다. 여하튼 이 점을 잘 챙겨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실 장관 자리가 아무리 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교육부의 여러 관료들과의 갈등 이런 것이 있어서 소신껏 해 나가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아오신 동안 많은 제자들이 존경하는 교수님으로 또 스승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이 안 되도록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최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 순서로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홍 위원 김교홍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내정자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오전 질의에서 교권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안 돼서…… 조금 더 여쭙 보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전보다는 교사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교육 예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하면 교육 예산이 사실 최하위인데요. 그런 교육 예산 속에서의 처우 개선적인 부분의 맥락도 있지만,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권에 대한 부분의 침해 사건을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보면 접수된 것만 683건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제공자가 학부모, 언론, 감독청 이렇게 순서가 가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나 하면 요즘 교사분들이 임용고시를 봐서 들어오는, 굉장히 실력 있는 엘리트들인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정말 소명의식과 책임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의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넘어갔을 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현상에 젖어드는 부분이 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보는데 물론 교사들의 소명의식과 책임성, 또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우리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사들의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의 예우는 핀란

드 정도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핀란드는 그래도 교사들이 존경을 받고 또 교사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접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체벌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또 하나는 교편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한 손에는 책을 갖고 있고 한 손은 어찌됐든 채찍 ‘편’ 자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아이들을 어떻게 계도해 나갈 것인가, 선생님이 어디까지 아이들을 계도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 보면 지름 1.5cm에 길이 30cm의 나무로 손바닥을 때릴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회 분위기는 체벌 금지조항을 담아서 법개정까지 조만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아이들을 진정으로 계도하고 아이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선생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접할 수 있는 교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정자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특히 체벌 문제는 문화가 많이 달라졌고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양육 방식, 교육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도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와 같은 체벌은 어떻게든지 피해야 된다고……

○김교홍 위원 그러면 체벌은 안 되고 어떻게 아이들을 계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이런 부분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교권의 침해가 그렇게 학부모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고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김교홍 위원 언론부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예, 언론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 문제는 역시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치 우리 교원단체들의 권한과 이런 것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동시에 교원단체들의 윤리운동도 필요하다. 대학의 여러 교원단체들이 윤리운동을 주장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학부모와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 존경심을 확보하는 것도 한 가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교흥 위원 좋습니다.

내정자께서는 학교에 한 40여 년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나실 때마다 학교의 교육 현장을 방문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인데 저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경쟁력은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을 여하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유기홍 간사, 권철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교 교육의 경쟁력, 이 부분은 내정자께서도 아시겠습니까라는 뉴스위크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00대 글로벌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또 작년에 발표한 더 타임즈를 보면 200대 대학에 우리나라 대학이 3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평가하는 IMD평가는 교육 부분이 61개국 중 4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잘 부합하고 있는가 하는 지수에서는 52위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의 공급 여부에 대해서는 54위, 이렇게 가서 과연 우리나라가 대학 경쟁력이 있겠는가?

물론 지금 우리 교육정책을 보면 초·중·고 부문과 대학을 떨어뜨려서 초·중·고는 해당 교육청에 많이 이관되었고, 대학은 교육부에서 많이 관장하고 있는데 대학 경쟁력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갈 것인가를 요즘 교육부에서 나오는 특수법인 문제도 있습니다라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물론 재정의 빈곤으로 해서 대학의 인프라이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는 아까도 나왔지만 대학과 대학원의 입학만 열심히 챙기고 있지 교육의 과정과 졸업에 대해서 챙기지를 않는, 말하자면 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학원의 질 관리는 앞으로 확실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우리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한 가지 더 주문한다면 지금 저도 내정자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 요즘 고등학교까지만 공부했다, 대학 가서는 공부한 기억이 별로 없다는 것이 우리 세간의 평이거든

요. 그래서 대학·대학원 교육 중심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정자께서 오전에 기본학습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유아기 아동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유아기 교육을 보면 체계가 정말로 안 잡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미술학원,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유치원과 미술학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교육보다는 케어의 개념이지요.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보면 유치원이 16.3%, 어린이집 놀이방이 27.2%, 유아미술학원이 15.2%, 기타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기본보조금도 나가는데 기본보조금은 어찌됐든 여기에 다녀야만 받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거나 친인척 집에 있는 41%의 아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에도 상당량의 어린아이들이 케어를 떠나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요건이 유치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열악하고요. 마찬가지로 미술학원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6세 정도면 인생의 배울 것을 거의 배웠다고 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또 우리 내정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미술학원과 유치원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통합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보면 부처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의 아이들도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도 받고 케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 줘야만 아이들의 유아기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체계화가 꼭 필요하다는 김 위원님의 말씀이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의 유아교육에 대한 큰 계획이 없이 이것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커 와서 관장하는 부처도 다르고, 또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 사립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국가가 이것을 무리하게 개입해서 손대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지금과 같은 상태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조정되고 전체 틀을……

○**김교흥 위원**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뒀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알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끝으로 우리 내정자의 성함을 보면 ‘믿을 信’자에 ‘한 一’자입니다. 20년, 30년 동안의 우리 교육이 굉장히 불신에 서로 접해 있습니다. 사실 불신만 아니고 믿음만 된다면 교육이 이렇게까지는 안 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 우리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마지막 위원답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신일 후보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무리 말씀을 시간 구애받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 김신일** 감사합니다.

준비된 것이 있지만, 저도 저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저거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저를 지켜보신 국민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소중한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에 있어서 문제는 모두발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교육을 통한 희망을 갖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소중한 교훈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런 모든 말씀을 제가 모두 종합적으로 잘 살리고 될 수 있으면 정책에 반영을 해서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어떻게든지 좀 낮추고 그리고 각 가정과 우리 국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희망을 갖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은 모두 저를 지원해 주셔야 될 응원군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육부의 직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마는 교육부를 채찍질도 하시지만 또 열심히 응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哲賢**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후보자나 일 다 끝난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많이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신일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직무 수행능력, 교육 분야의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증과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갈 막중한 자리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국민들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청문회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두 분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하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회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8일 오후 2시에 개최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권철현	김교홍	김영숙	김영춘
민병두	안민석	유기홍	이경숙
이군현	이주호	임해규	정문현
정봉주	주호영	최순영	최재성

○청가 위원(1인)

김홍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전문위원	구기성

○출석 공직후보자

김신일

○정부측 참석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	-----

【보고사항】

○의안 회부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 발의)

(2006. 9. 11 공성진·김태년·배일도·신상진·안상수·이경제·이성구·이인기·임해규·임태희·엄호성·유기준·정종복·주성영 의원 발의)

9월 13일 회부됨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6. 9. 12 이주호·이인기·신상진·김정권·공성진·박재완·정병국·임해규·김애실·윤건영 의원 발의)

9월 1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확대 촉구 결의안

(2006. 9. 11 이광재·김재홍·김종률·김태

년·노웅래·노현송·박세환·백원우·서재관·신중식·안병엽·엄호성·오제세·유승희·이경숙·이계안·정병국·정성호·정청래·조일현·최순영·최연희·한병도·허천의원 발의)

9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